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 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

제1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 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14: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소개

▣ 설립 취지·목적

- 시장과 정부 실패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국가비전 연구 필요
 - 사람을 우선에 놓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방향 정립
 - 국가·사회적 혁신정책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정치·입법적 조건연구
- 공공부문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활성화 정책과제 개발
 - 사회적가치 정책생산, 행정체계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제 발굴
 - 지역자원 발굴·재생·공유 등을 통한 선순환적 사회적경제 구축·확산 과제 도출
- 사회적경제 동향,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와 당·정 정책네트워킹 활성화
 - 사회적경제의 우수 사례 현장 경험 공유, 관련 선진이론·제도·사례 연구
 - 국내외 사회적경제 동향과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채널 필요
- 당과 정부에 선제적인 정책 제안을 통하여 민주연구원의 정책그룹 위상 강화, 정책 환류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확산하여 정책정당으로서의 신뢰 구축

▣ 설립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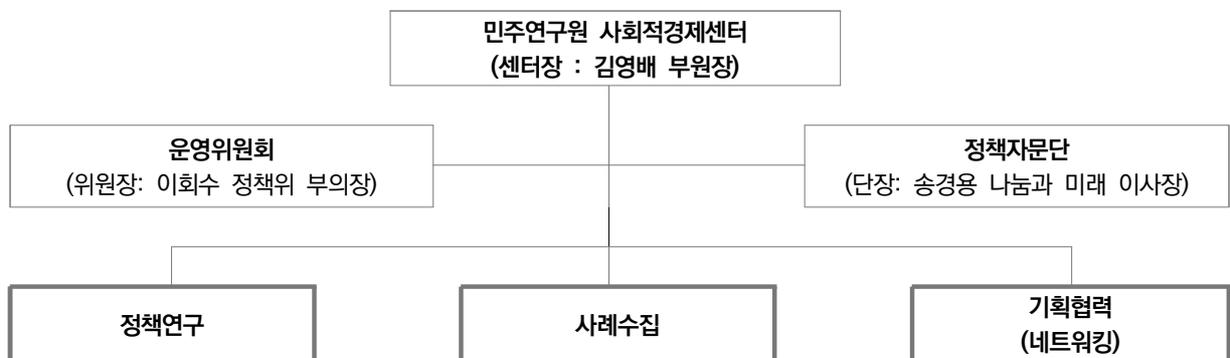
- 2018.1월 :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영 국회의원)에서 민주연구원 산하에 사회적경제센터 설치 제안
- 2018.1월 : 민주연구원 원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센터 설치
- 2018.2.7. : 민주연구원 정기이사회에 사회적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안 보고

▣ 활동 목표

-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를 담은 새로운 국가모델 연구
 - 선진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 정책과제 도출
 - 사회적경제 연구그룹, 현장 활동가들과 협력 통해 국가 중장기 성장 전략 마련

- 공공부문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과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담론 개발 및 제안**
 - 국가·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조사 및 연구
-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통해 **열린 정책공간으로 운영**
 - 간담회·포럼·워크숍 등 정례적 개최
 - 사회적경제 정책대안을 담은 각종 연구보고서, 전국 사례집 등 발간
 - 현장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오픈 정책연구그룹을 형성해 현장 기반의 연구 추진
- 당·중앙정부·지방정부 사회적경제 단위 **네트워킹 및 정책지원**
 - 국내외 사회적경제연구소,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및 연대
 -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수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지원체계 구축

▣ 조직 구성



(정책연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정책연구, 제도개선 방안, 아젠다와 혁신과제 발굴 등

(사례수집)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식·정보 교류,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례 발굴 등 추진

(기획협력) 행사프로그램·세미나 기획, 네트워킹 등 소통채널 운영

- 사회적경제센터장 : 김영배 센터장(민주연구원 부원장)
- 운영위원회(운영위원) : 이회수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15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기획, 활동 방향과 사업 내용 심의

- 정책자문단(자문위원) : 정책자문단장 및 사회적경제(가치) 분야 외부 전문가 30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 센터 활동 방향과 정책 자문 등(활동기한: 5년, 향후 연장 가능)
- 사회적경제센터 산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네트워크사업 분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사무국: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정책연구)과 정책네트워크실(네트워킹) 등
 - 당·정·청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과제 도출
 - 사회적경제센터 사업계획 마련
 - 시민협력·교육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모색

▣ 2018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당·정·청의 상시적 정책협의 구조 주도
-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사회적경제 공약개발을 주도하고, 후보자의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주도성 확대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시적 토론구조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분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확산
- 2018년도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주요 사업
 - ① 사회적경제 의제 확산 및 2018 지방선거 공동공약 추진
 - ② 사회적경제 우수 사례 아카이브 구축
 - ③ 사회적경제 법·제도개선 및 입법 지원
 - ④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⑤ 전국 싱크탱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세미나 개최
 - ⑥ 해외 사회적경제기관 우수사례 탐방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 기간 : 2018년 4월 18일, 4월 24일 (총 2회)
- 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 주관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1회	2018.4.18(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 진행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이회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 - 발표 1 :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황과 미래전략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발표 2 : 문재인정부 벤처창업 정책방향과 소셜벤처 육성방안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창윤 한국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이사 •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 서진석 행복나눔재단 SI 그룹장
제2회	2018.4.24(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 진행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이회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 - 발표 1 :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 발표 2 :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 평가센터장 •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안정희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 전충훈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대표

☑ 개요

- 일 시 : 2018.4.18.(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주 제 :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 주 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 주 관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 진행순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사전 등록 (13:30~14:00)		
1부: 사전행사(10분)		
개회	14:00~14:05	• 개회선언/국민의례/내·외빈 소개
	14:05~14:10	• 인사말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2부: 발표 및 토론(110분)		
좌장	이희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	
주제 발표	14:10~14:50	• 주제 1 :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황과 미래전략 • 발 표 : 김용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 2 : 문재인정부 벤처창업 정책방향과 소셜벤처 육성방안 • 발 표 :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지정 토론	14:50~15:30	•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창윤 한국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이사 •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 서진석 행복눔재단 SI 그룹장
종합 토론	15:30~16:0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C/O/N/T/E/N/T/S

사회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1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소개	i
■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iv
■ 연속토론회 1회 프로그램	v
■ 목차	vii

발표문

■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황과 미래전략	1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벤처창업 정책방향과 소셜벤처 육성방안	37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토론문

■ 소상공인 관련 이슈 해법 모색 '현장을 중심으로'	67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소상공인의 희망,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73
정창윤 한국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이사	
■ 한국 소셜벤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정부정책방향	107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및 제언	111
서진석 행복나눔재단 SI 그룹장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우선에 놓고 정부와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로 인해 파급되어진 불평등,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람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공공성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에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방향을 제안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자, 올해 2월 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간 및 지역주도의 사회적경제 정책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센터 출범을 기념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와 소상공인, 도시재생 문제를 사회적경제와 연결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 주요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센터를 열성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영배 센터장님과 이회수 운영위원장님, 사회적경제센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진영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진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진 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그 핵심 대안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오늘의 이 자리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영리적 목표의 달성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중요시하고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이익이 공존하는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써 작동해야 합니다.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해결책에 주목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영역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현장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알찬 지혜들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센터 출범을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말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회적경제센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는 서울시 성북구청장 김영배가 아닌,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사회적경제센터장 김영배로 인사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 정부운영을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2017년 10월18일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2018년 2월7일에는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2013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초대의장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으로서 지난 2010년부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마을의 변화를 일궈왔으며,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시대입니다. 사익과 여의도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공공성과 광화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용성장의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경제사회를 설계하고, 새로운 운영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행정혁신을 이뤄내야 하고, 국민경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Frola 교수가 주장했듯이 “새로운 소득기회와 지역편의시설을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건설”로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 국가 비전을 정립해 나가고, 공공혁신과 사회혁신,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정당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 정당과 정부, 정부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조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의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청년일자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 사회현안들을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의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김태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입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정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관련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느라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질의 문제는 등한시 되었습니다.

이제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6년이 흘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협동조합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조합 설립 이후 내실을 갖추지 못한 조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이 내실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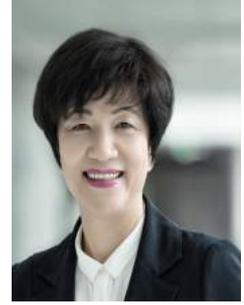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소셜벤처도 육성해야 합니다.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시드머니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서 소셜벤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 사례가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의 썬키스트,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처럼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사람에게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에 따른 일자리는 자연스레 나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공적 금융의 역할 확대,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축하합니다.

축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사회적경제센터 출범을 기념하여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을 주제로 열리는 연속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창출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 진영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님, 이희수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님,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소외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 착한 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은 6.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해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출하는 소상공인, 청년 등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천억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공공조달에 사회적가치 반영을 신설하는 등 금융, 판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주연구원의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의 발전 및 참석자 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발표문 1 ·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황과 미래전략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황과 미래전략

김용진 교수
서강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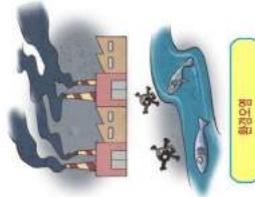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황과 미래전략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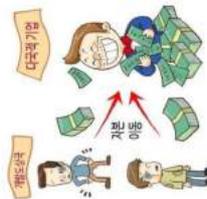
1. 협동조합의 이해
2. 소상공인 현황
3. 사업자 협동조합
4. 결론과 시사점

협동조합의 이해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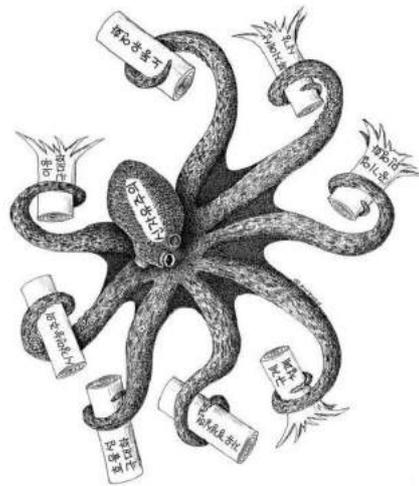


환경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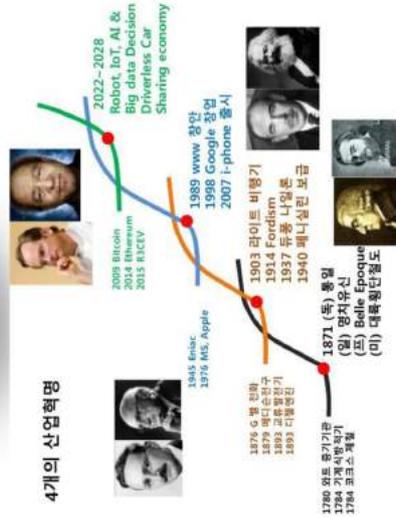


자본을 통한 이익 관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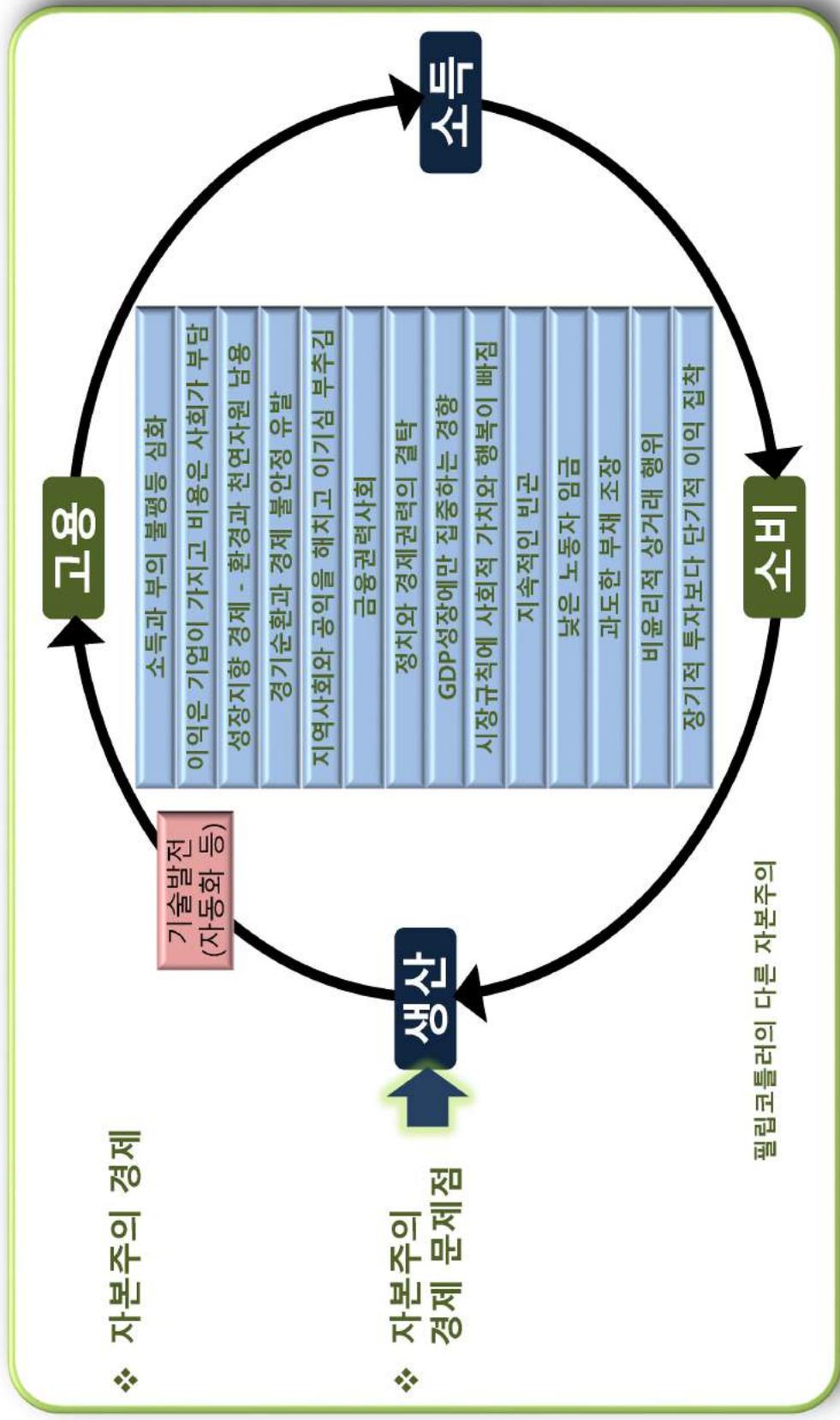
신자유주의



제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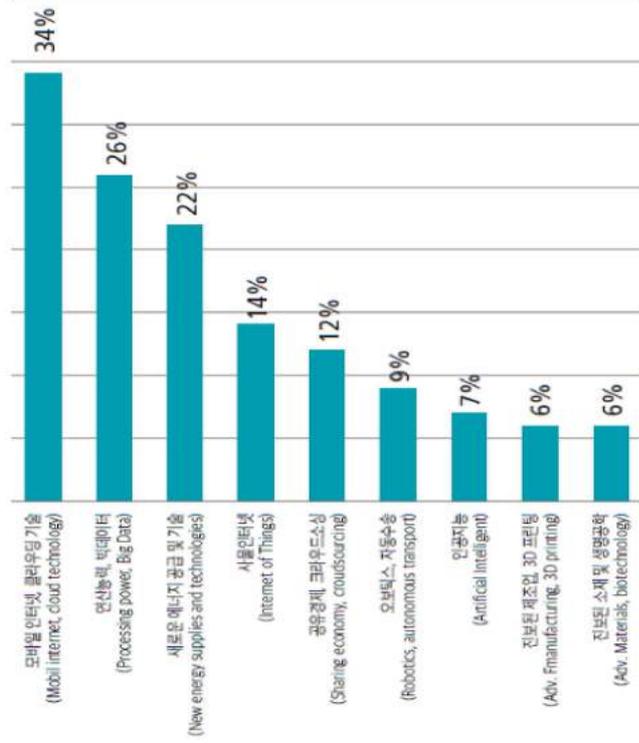


협동조합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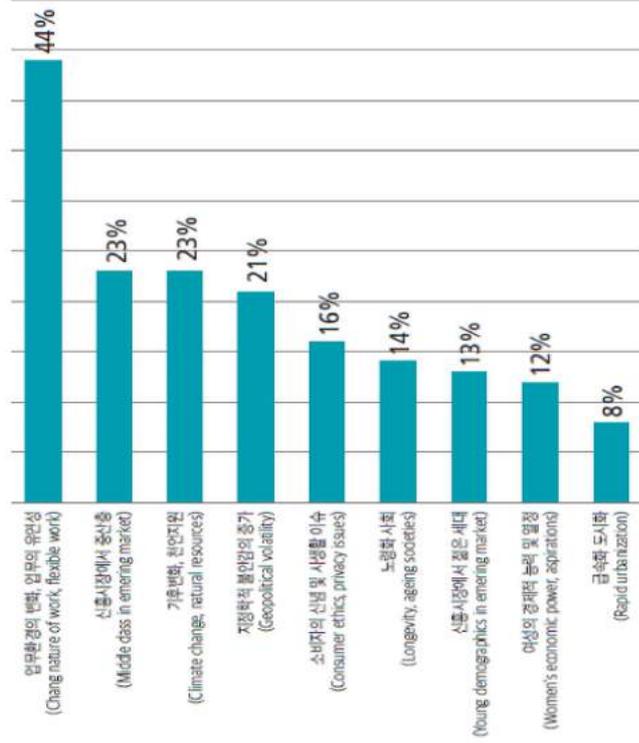


협동조합의 이해

제4차산업혁명의 유발요인들



(b) 기술적 주요 변화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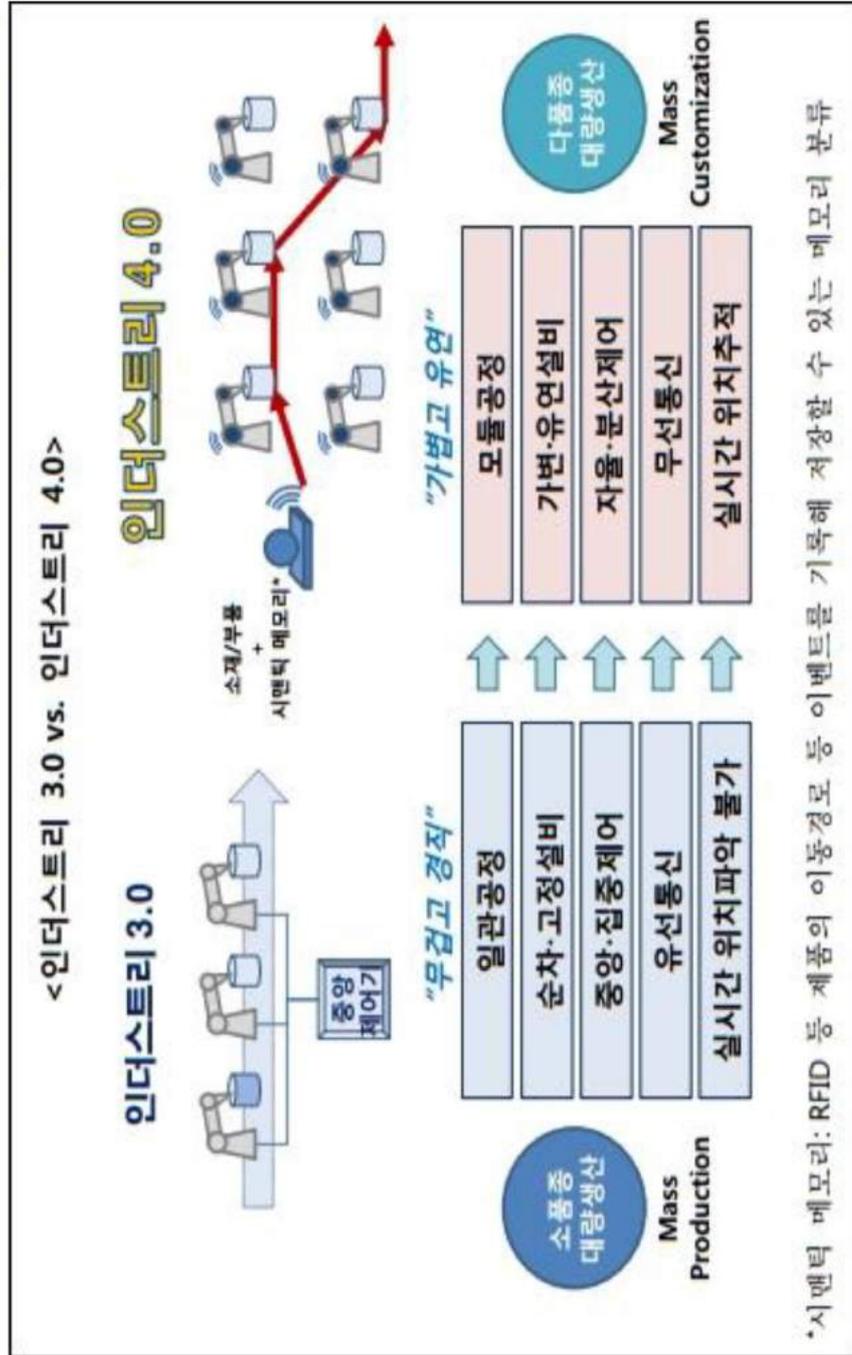


(a) 사회-경제학적 주요 변화동인

※ 출처 : The Future of Jobs(WEF, 2016) 재구성

협동조합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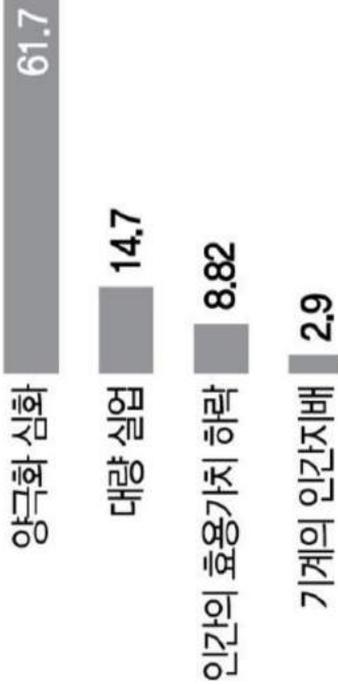
인더스트리 4.0



협동조합의 이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가

(단위: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때,

- 1)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 위기를 안정적으로 넘김
- 2)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파산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한 반면, 일부 협동조합은 오히려 추가 성장을 이룸
- 3)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약 8천개)에서는 해고 없이 이 위기를 극복했고, 스위스에서는 코프(coop)가 카르포 매장 12개를 인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농업협동조합은 공급량을 늘리며 성장

1970년대 서유럽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일자리를 지킴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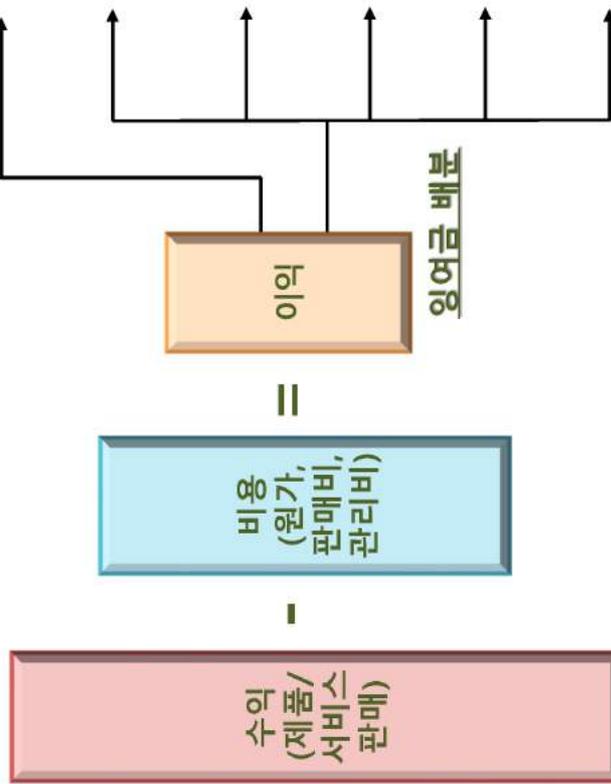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과 다른 사업조직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근거 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인가
책임 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주)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의 원리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사회적 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소비자 협동조합

판매가격 인하, 소비자 복리후생 향상

사업자 협동조합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 규모의 경제 확보

직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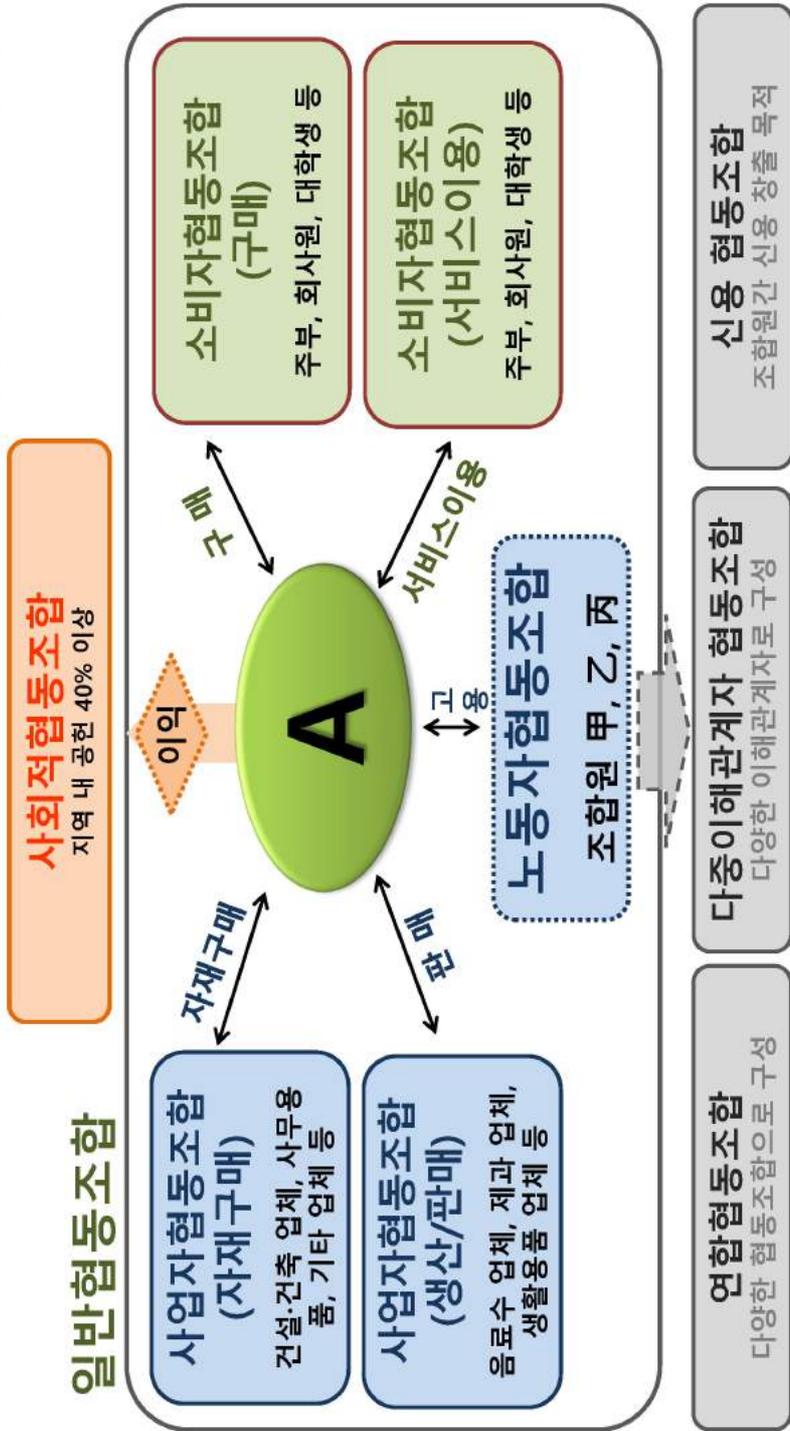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이해

기존의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KBIZ 농산어촌협동조합

이외에도
 연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이
 개별적인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존재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 1.누구나 5명이 모이면
- 2.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10,375	11,077
일반협동조합연합회	53	
사회적협동조합	64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2012.12.1 ~ 2017.3

협동조합의 이해

법 시행 후 실제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유형들

- 사회서비스 : 의료서비스, 돌봄, 교육, 장애인직업재활, 외국인근로자 복지,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등
- 환경 : 의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 햇빛발전 등
- 문화예술 : 공예, 이벤트, 출판, 공연축제, 언론, 여행업 등
- 제조업 : 수제화, 두부 등
- 도소매(유통) : 골목가게, 신발, 동네서점, 식자재 및 잡화, 도시락판매, 농산물
- 농수축산 : 도시농업, 로컬푸드, 육류생산가공 등
- 기타 서비스 : 컨설팅, 미용, 인력소개 및 파견, 상조(장례), 대리운전, 개인 택시, 주차, 이사업, 숙박업, 부동산중개, 산모도우미, 세탁 및 봉제 등
- 기타 : 전통시장활성화, 자동판매기 위탁, 이동통신 등

협동조합의 이해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 스페인 3대 기업 그룹
 -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교육, 연구개발 등 120여 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 고용 10만명, 매출 24조원 규모

* 매출액 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자



트렌토 협동조합 (이탈리아)

- 1890년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1895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설립
- 매출액의 3%회비 납부, 연맹차원의 행정, 법률, 세무, 설립 등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단위조합의 발전유도
- 조합수 536개, 조합원 25만 5천명(인구 50만명 중 51%), 종사자 16,000명
 - 매출액 24억 유로(한화 3조 6천억원)

협동조합의 이해

FC바르셀로나처럼 소유도 운영도 공동으로

정부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뉴스를 쫓습니다. 그런 국내에서는 낯선 등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페인 축구팀으로 유명한 FC 바르셀로나와 오펜저우스로 유명한 미국 산키 스톤의 공통점은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클럽회원 17만 명이 주인이며 이들이 투표로 구단주 개인 회장을 뽑습니다. 또 지난 시즌까지 유니폼 수익을 포기하고 유니폼에 유엔이동기금(유니세프) 등을 새겨 홍보하고 수익도 일부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점도 다른 축구팀과 다릅니다. 산키스톤도 6000여 명의 오펜저우민과 8개 협동조합이 공간상인의 독과점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체입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보험회사 일리안존, 미국의 풍신사 AP통신 등도 협동조합이라는 장광장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소유자'인 장애인 서투저자·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기업모델로서 세계적인 경쟁위기에 대응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이 89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협동조합은 10억 개로, 다국적기업 보다 고용 효과가 큼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기존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은 제한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일자리 8억 개면 협동조합 10억 개로 고용효과 커
이용자 이익위해 출자 배당 제한
회사법인 비해 소액창업 쉬워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을 허가한 것과 달리 금융 등 일부 영역만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개인, 법인, 조합)로 설립 가능하고, 다른 법인과 달리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의 차이

협동조합	주식회사
공동으로 소유해 공동의 경제 사회적 목적을 충족하는 자율적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자주주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
1인 1표(출자규모와 무관)	보유주식 수에 비례
조합원은 기업 형태 자유로구나 기업자격 제한 가능	주식을 보유하면 투자자 자격 갖게 됨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관리수준으로 엄격히 제한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배당을 결정

해외의 유명 협동조합

- FC바르셀로나(스페인)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로 17만 명의 클럽회원이 출자자, 4년마다 회원들이 직접 단장 선출
- 산키스톤(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에리조나 2개주 전체 농민 6000명이 독과점에 맞서 출범한 판매협동조합
- 미그로스(스위스)
정밀물 유통마진을 평균 40% 낮은 소비자협동조합. 스위스 인구 700만 명 중 200만 명이 조합원
- 몬드라곤(스페인)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복합체



협동조합의 이해

볼로냐 시(이탈리아)

- 1960년대 말까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지만 현재 유럽 10대 풍요도시로 평가
- 2010년 기준
 - 1인당 소득 : 4만달러(이탈리아 전체 평균의 2배)
 - 실업률 : 3.1%에 불과
- 협동조합 수 400개
- 볼로냐는 핵심 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이며 도시생산의 45%를 협동조합이 담당

볼로냐에서 배우는 57지 팀

- 1 대기업 유치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생적인 중소기업에 주목하라
- 2 새로운 정책보다는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개발하라
- 3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고, 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라
- 4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동업자 간의 관계를 정립하라
- 5 협동조합은 철저한 공동소유와 분배를 원칙으로 운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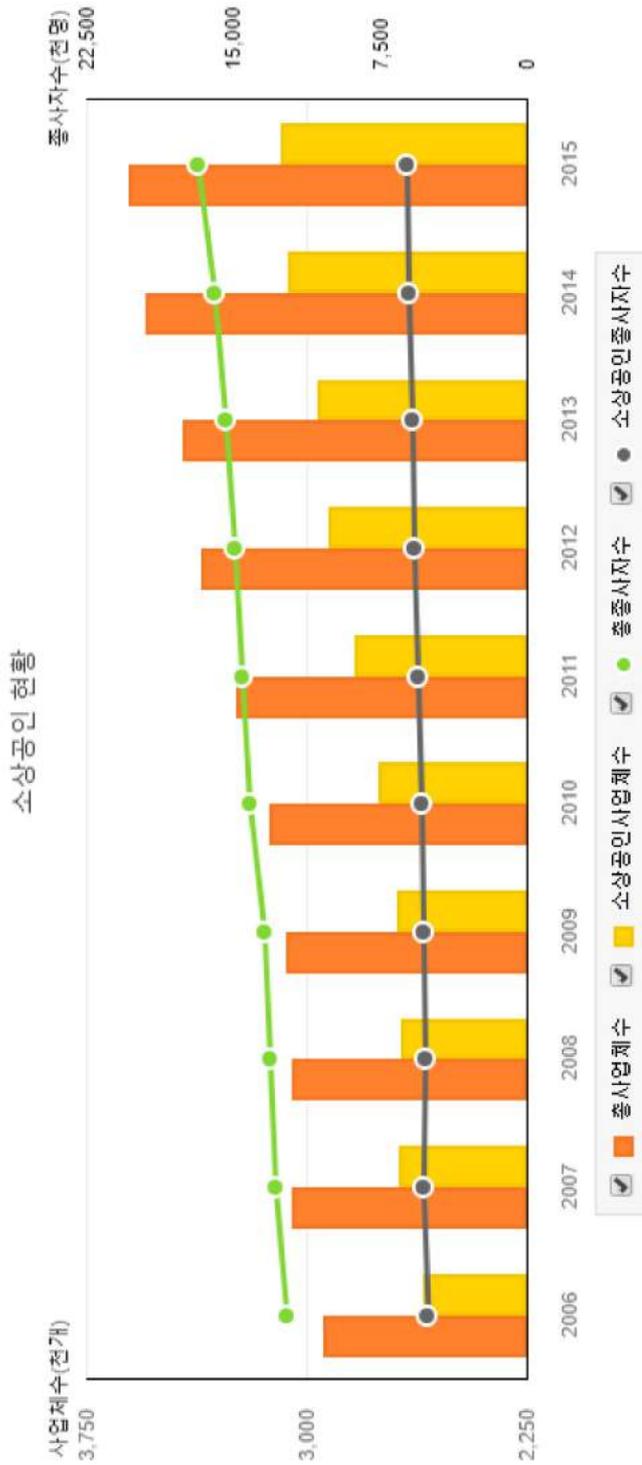
퀘벡 주 (캐나다)



- 1980년대부터 주정부와 민간·시민단체가 함께 일자리, 복지, 육아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에 참여 → 96년 부터 거버넌스를 통한 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 1997년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 관련법 개정
 - 이용자나 종업원 외에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조합원으로 확보 가능
 - 이후 산업 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

소상공인 현황

- '15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308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6%이며,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06만명으로 총종사자수 대비 36.2%의 비중을 차지함
- 전체적으로는 정체상태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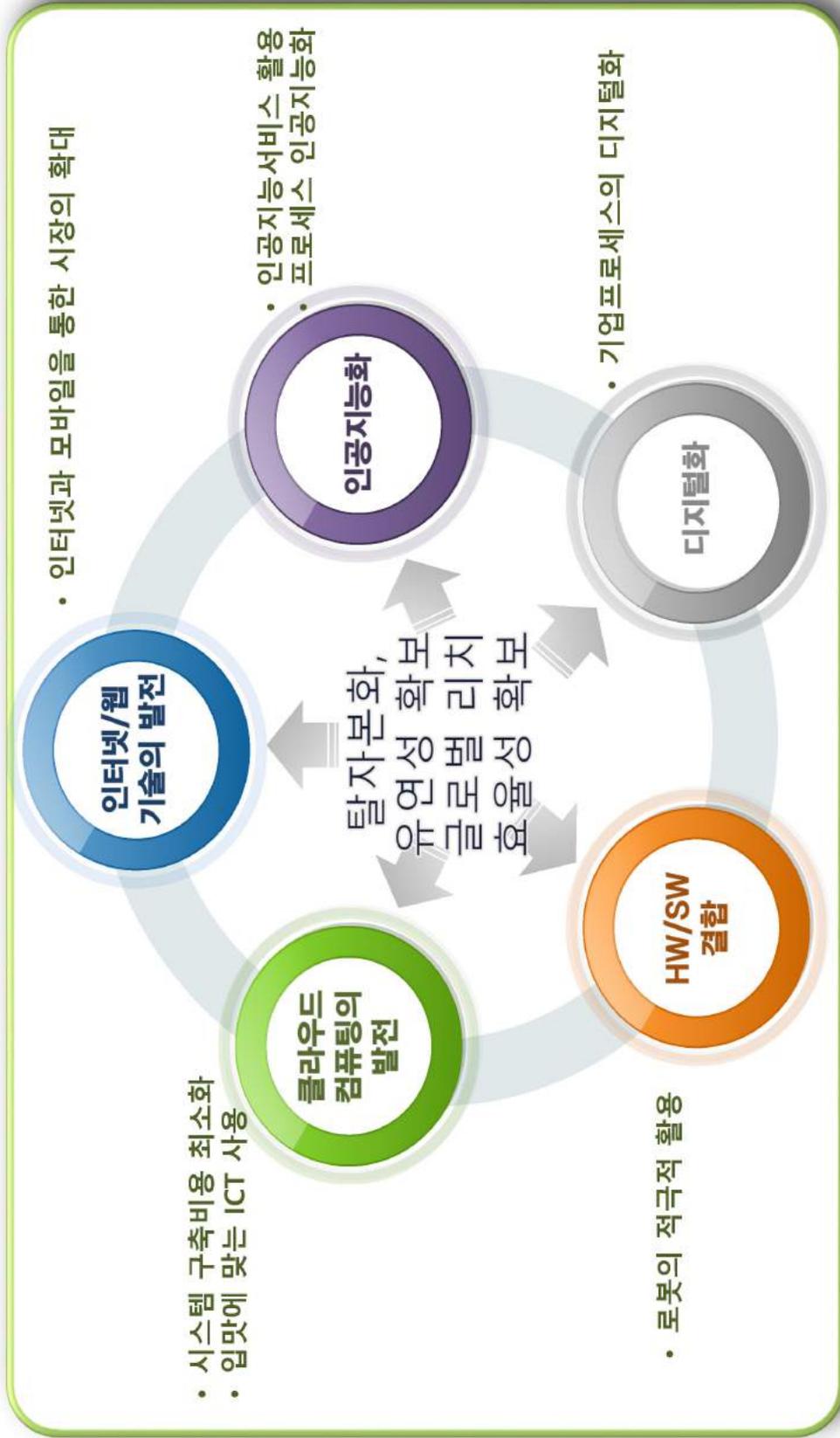


소상공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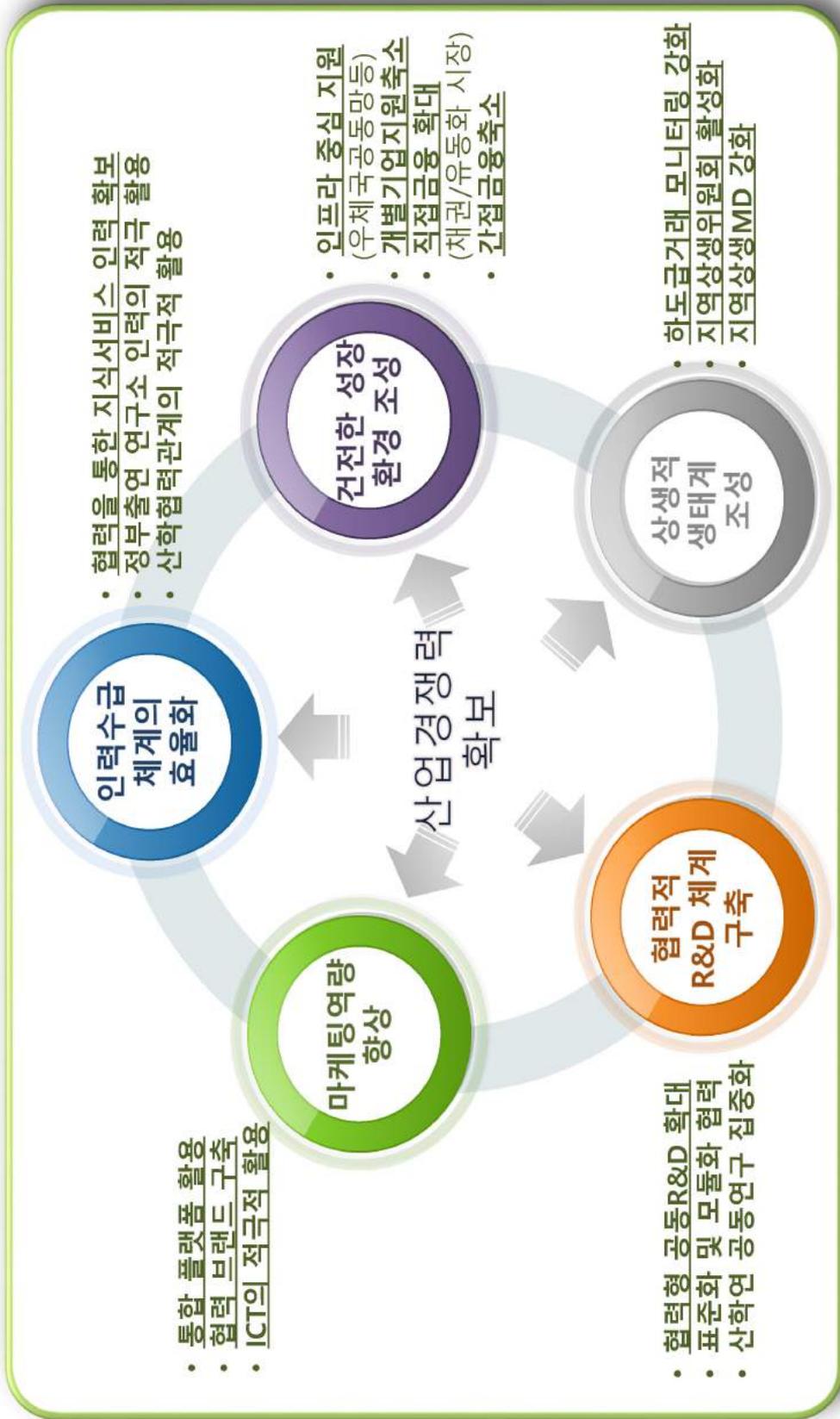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협요인

- (불평등, 노동시장, 비정상)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빈부격차 확대 및 노동시장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비정상적 상황전개 예상
- (승자독식, 부가가치의 과점화)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은 필연적으로 승자독식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산업 부가가치 편중현상에 의해 선진국/신흥국간 격차 확대와 선진국/신흥국 간의 분업구조가 와해될 가능성이 존재
- (산업의 공동화) 스마트 비즈니스 부문의 기술 열위에 있는 신흥국에 서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예상
 - ★ 신흥국이 주도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빠르게 시산업으로 편입되는 반면, 허브기술과 인터넷 플랫폼의 과점화는 경계를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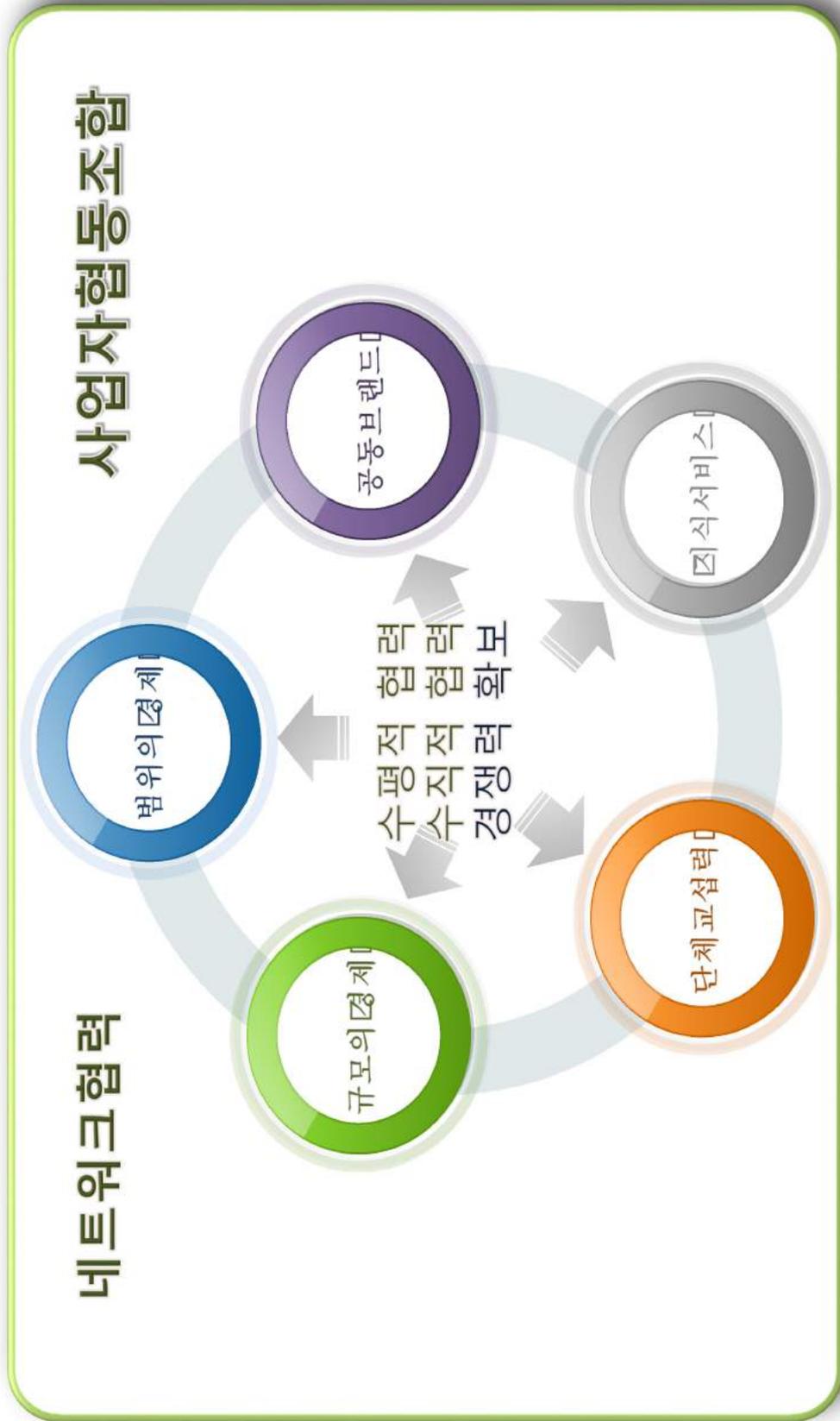
대안은? 기술발전 대응 전략?



대안은? 정부정책의 재구성?



대안은? 협력을 통한 대응?



사업자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의 정의

개별사업자(법인, 자영업자 등)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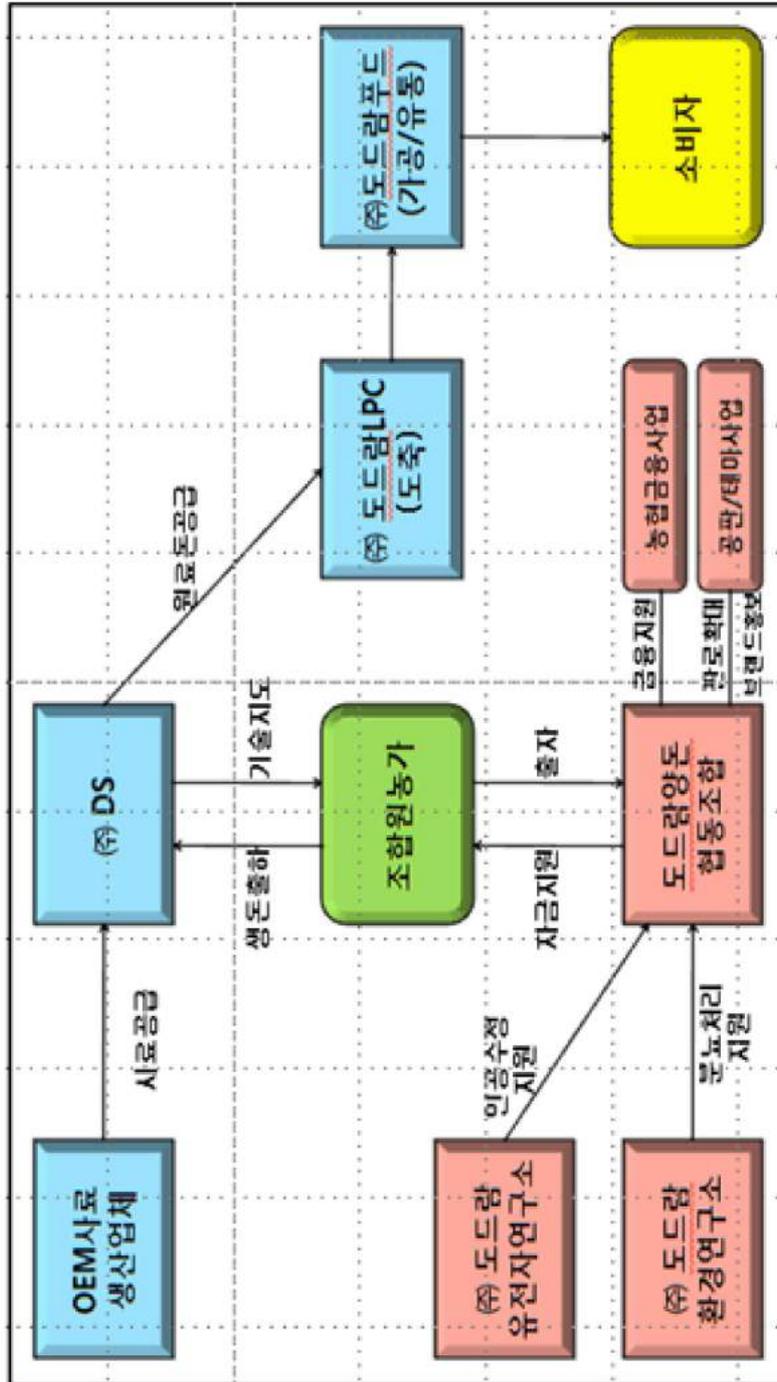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론적으로 말해,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공동브랜드 활용, 단체교섭, 전문경영팀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개별 중소기업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자 협동조합

모델	특징 및 주요 업종	조합의 주요 역할
공동구매 및 공동사무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불공정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높은 업종이나 지역에서 효과가 높음 □ 시장상인, 프랜차이즈가맹점들의 공동구매 등 	조합원 사업자가 필요한 중간재를 저렴하게 공동구입하기 위한 계약 대행 조합원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업무의 일부를 공동 대행
전략적 제휴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마케팅·공동브랜드 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 품질관리·공동 생산 관리 □ 이업종간 시너지 발휘를 목표로 하는 모형 □ 수제화, 봉제/ 전문서비스업 등 	조합원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하는 역할 (협동조합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가공/유통 기업)
체인형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인점포주인들이 체인본부를 소유하여 점포 비즈니스혁신을 위한 협력과 연대 □ 자동차정비업, 건축자재 소매업, 세탁업, 제과점, 외식업 등 	조합원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역량 제고를 지원 하는 역할 (협동조합은 조합원 마케팅/점포운영 지원기업)

사업자 협동조합

도드람



사업자 협동조합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감귤 재배자 6,000여 명으로 구성
미국 전체 오렌지 생산의 20%
전 세계적으로 600여개의 브랜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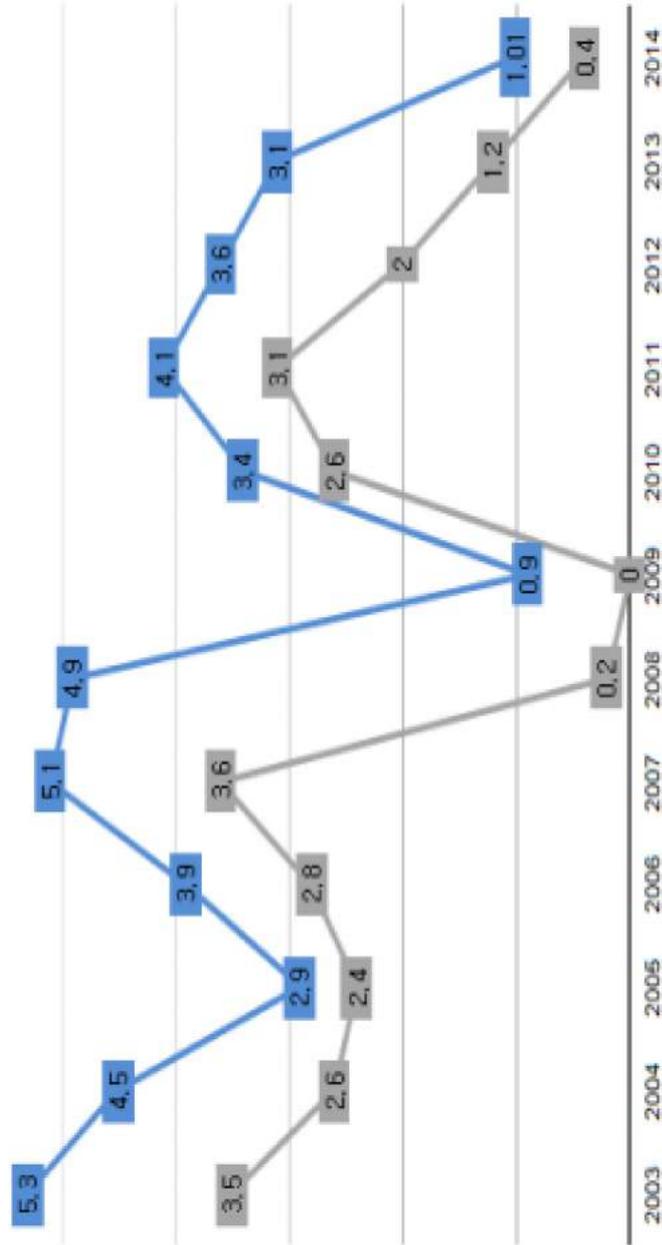
사업자 협동조합

프랑스 상업협동조합

- 3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 소매업 시장의 30% 비중을 차지 (2014년)
- 총 1,419억 유로 매출(한화 약170조원)을 올리고 있는데 전체 GDP 의 7% 를 차지함
- 89 개 상업협동조합이 31,574 개 자영업자 혹은 소기업가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고 153 개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음.
- 89개 상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점포는 모두 43,870 개이고 이 점포와 상업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34,308명

사업자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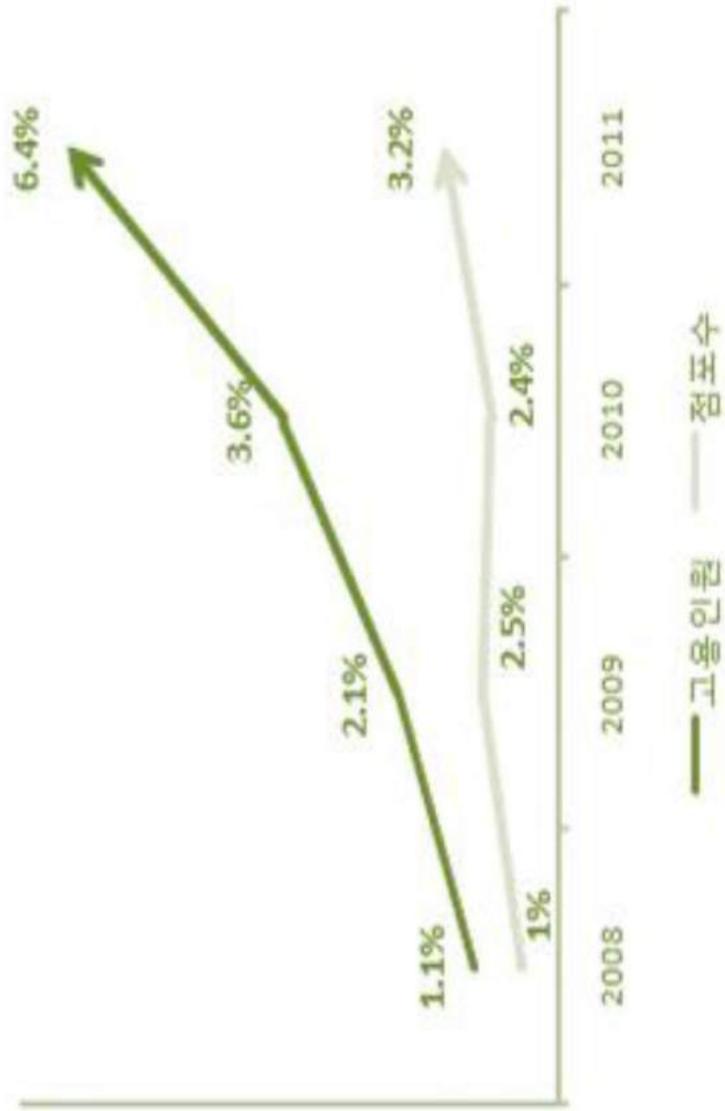
프랑스 상업협동조합



— 상업협동조합 소속 자영업 매출액 성장률 — 전체 상업부문 업체 매출액 성장률

사업자 협동조합

프랑스 상어협동조합



결론과 시사점

협동조합의 성장과 변화의 단계별 위기

위기	정의
신뢰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발생 초기의 위기 ●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서 사업의 소유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 협동조합의 성공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임이 선구자적 시도와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점진적인 인정을 확보
경영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협동조합의 실패로 인하여 조합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조합에 필요한 기술이나 사업경험 제공에 대한 문제 대두 ● 유능한 경영자의 경영참여 및 다수의 성공사례 축적, 새로운 형태의 성공모델의 구축으로 인하여 위기 극복
사상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확립기에 발생하는 문제 ● 협동조합의 목적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의문제기 ● 상업적인 성공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영리기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

(자료: 레이들로 보고서 (2000)에서 인용)

결론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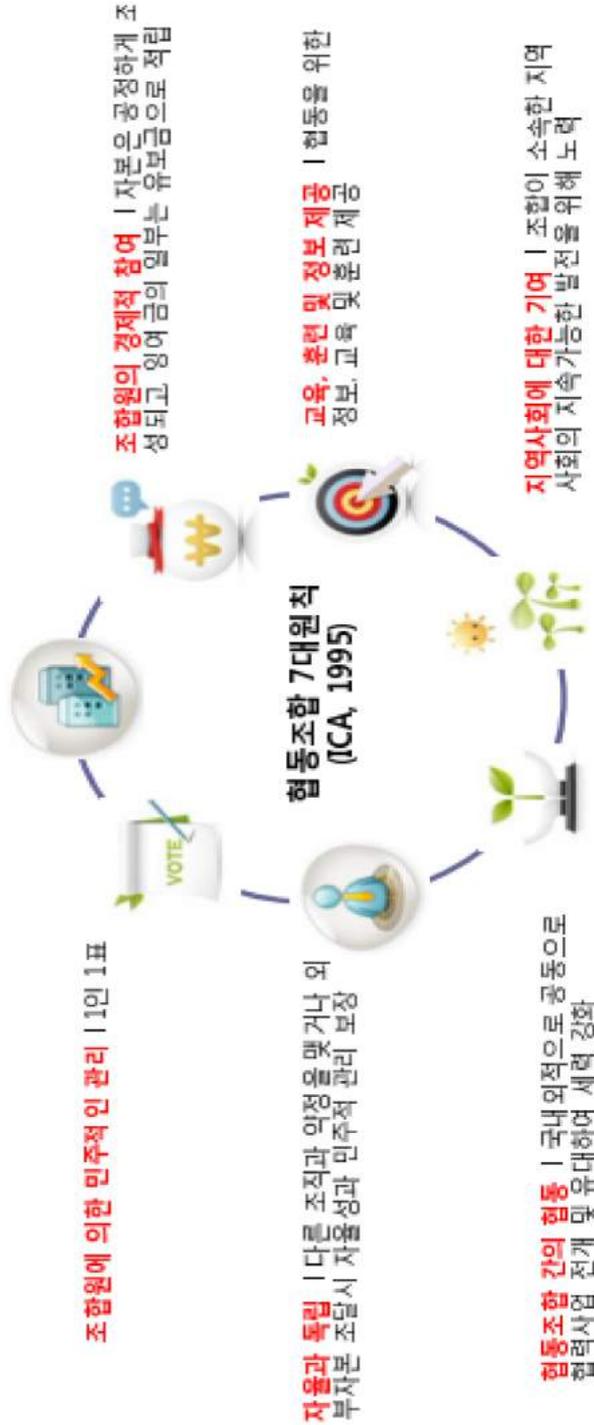
프랑스 상업협동조합의 성공요인

- ✓ 기업인이 상업협동조합 네트워크에 가입할 때, 그는 모든 수단이 그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안다 : **성과**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 ✓ 인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 **인간성** 없이는 견고하지 않다!
- ✓ 상업협동조합의 성공요소인 선순환은 완전한 **시너지**에 의해 창조된다 : 사람에서 수익으로, 수익에서 사람으로!
- ✓ 모든 기업주의 **독립성과 위험부담**은 각 조합원의 사업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동하는 네트워크에서 필수불가결하다.
- ✓ 개인적 이익은 끊임없이 집단적 이익에 의해 강화된다. 그들은 서로를 풍부하게 한다.
- ✓ 점포 영업권의 자본금은 상업협동조합의 자본금과 같이 **조합원**에게 속한다 ; 조합원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 ✓ **조합원**은 지역에서의 삶에서부터 네트워크의 활동과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 ✓ 의사결정 시스템은 수평적이고 1인 1표 원칙에 따라 완전히 민주적이다.
- ✓ 점포의 공동출자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대**는 그룹의 지속 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결론과 시사점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자발성,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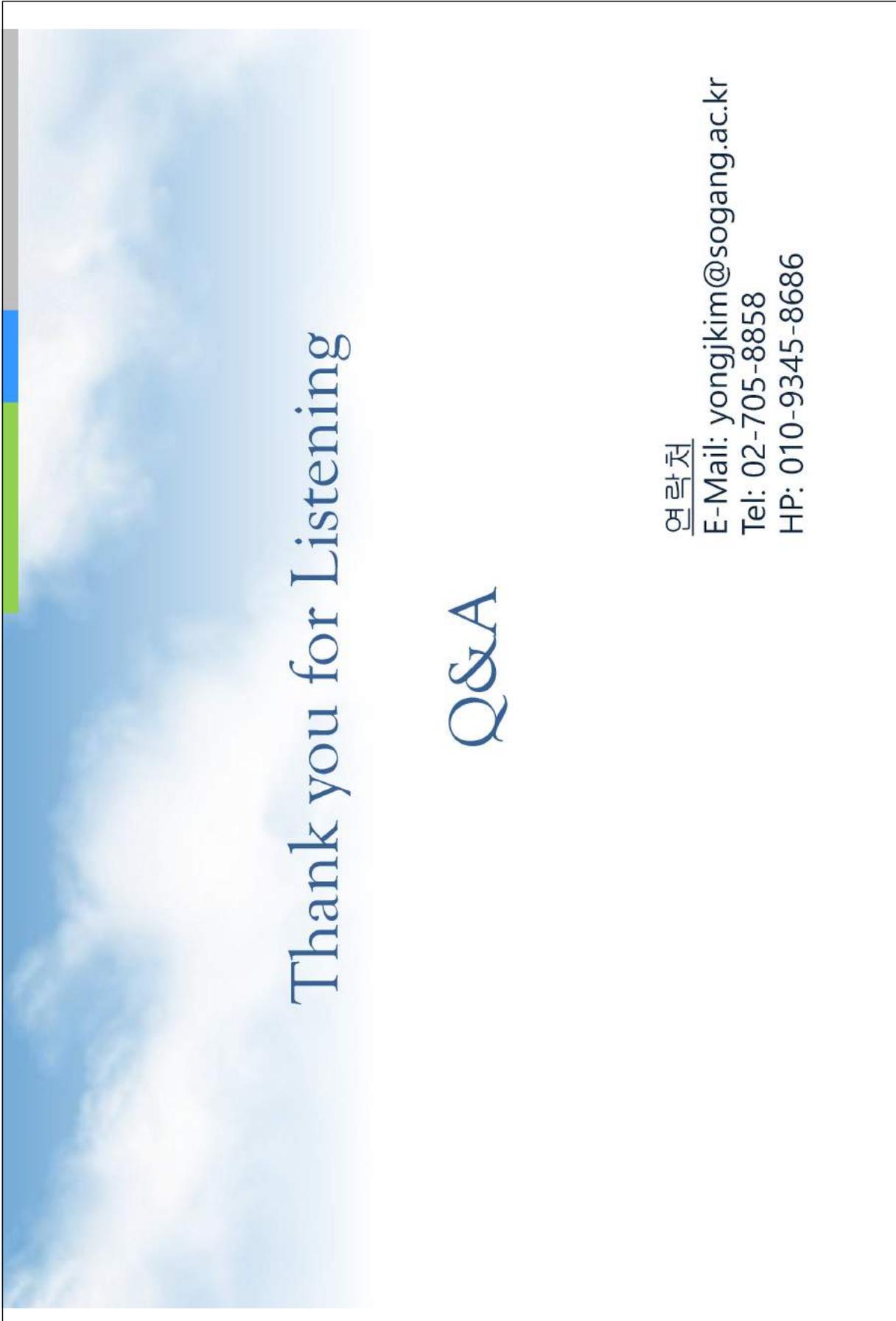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결론과 시사점

지원정책





Thank you for Listening

Q&A

연락처

E-Mail: yongjkim@sogang.ac.kr

Tel: 02-705-8858

HP: 010-9345-8686

· 발표문 2 ·

문재인정부 벤처창업 정책방향과 소셜벤처 육성방안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목 차

I. 혁신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방안

- 1. 벤처·창업 생태계 현황 41
- 2. 추진방향 43
- 3. 세부추진과제 44

II.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 1. 추진배경 59
- 2. 소셜벤처 생태계 현황 61
- 3. 해외의 소셜벤처 지원정책 63
- 4. 추진방향 및 과제 65

I .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1. 벤처·창업 생태계 현황

①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 '00년 초반 벤처 붐 등 역동적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가 IMF 극복 및 성장에 기여했으나, 이후 **전반적 활력이 저하**
 - * 주요 도시별 창업 생태계 가치(Startup Genome, '17년, 세계 55개 도시, 10억불) : (실리콘밸리) 264, (베이징) 131, (텔아비브) 22, (싱가폴) 11, (서울) 2.4
-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하로** 세계 233개 유니콘기업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개,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도 선진국 대비 저조
 - *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피터슨연구소, %) : (美) 32.1, (日) 63.0, (韓) 18.5

② 창업 양적 확대,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

-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05:1만개 → '18.3 : 3.5만개) 등 **양적 지표들은 지속 상승 추세**
-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미흡**
 -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며, 성공 가능성 높은 석박사급** 등 **고학력 우수인력** 창업도 부족
 - * 기회추구형 창업비중('14년, %) : 이스라엘 58.0, 미국 54.0, 중국 43.0, 한국 21.0
 - ** 창업자 중 석·박사 비중(14년, 창업 7년내 기업 198만개 기준)은 5.3%에 불과

③ 주요국에 비해 벤처투자 부족 등 모험자본 역할 미흡

-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 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등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
 -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 : (美) 0.33, (中) 0.24('14년 0.11), (韓) 0.13
- 벤처투자의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내 VC의 **보통주 투자 비중은 약 20%**에 불과, 스타트업의 **엔젤***, **클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자금조달 수단도 초기단계**
 - * 엔젤투자 비중(벤처투자+엔젤투자 대비, '15년, %) : (美) 28.8, (英) 29.1, (韓) 6.3
 - ** 클라우드펀딩 '16.1월부터 자금조달 허용, 월평균 발행건수가 12건에 불과

4 '투자 → 회수', '실패 → 재도전'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

○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로 인해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제약

- M&A 등에 대한 기존 대기업·투자자의 인식·참여부족,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관련 시장조성이 여전히 부진*

* 벤처투자 회수비중('16년, %) : (美) M&A 94 vs IPO 6, (韓) M&A 11 vs IPO 89

- 창업 후 코스닥 상장·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코스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

* 창업 후 코스닥시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 소요('16년)

**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규모(조원 IPO+유상증자) : ('99) 4.5 → ('00) 7.1 → ('16) 3.7

○ “창업실패 = 재기불능” 공식이 아직까지 유효,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지속 등 사업실패에 대한 창업자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

* 폐업기업 대표자 부담(중기부, '17년) : 3.56억원(보증 대위변제 3.09 + 조세체납 0.37 등)

- 정부 정책지원도 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미

* '18년 창업·재도전 정책지원 금액(억원) : (창업단계) 5,945 (재도전단계) 188

** 2년 생존율 비교(%) : 창업기업 47.5('14년) vs. 정부지원 재도전기업 83.9('16년)

⇒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창업 국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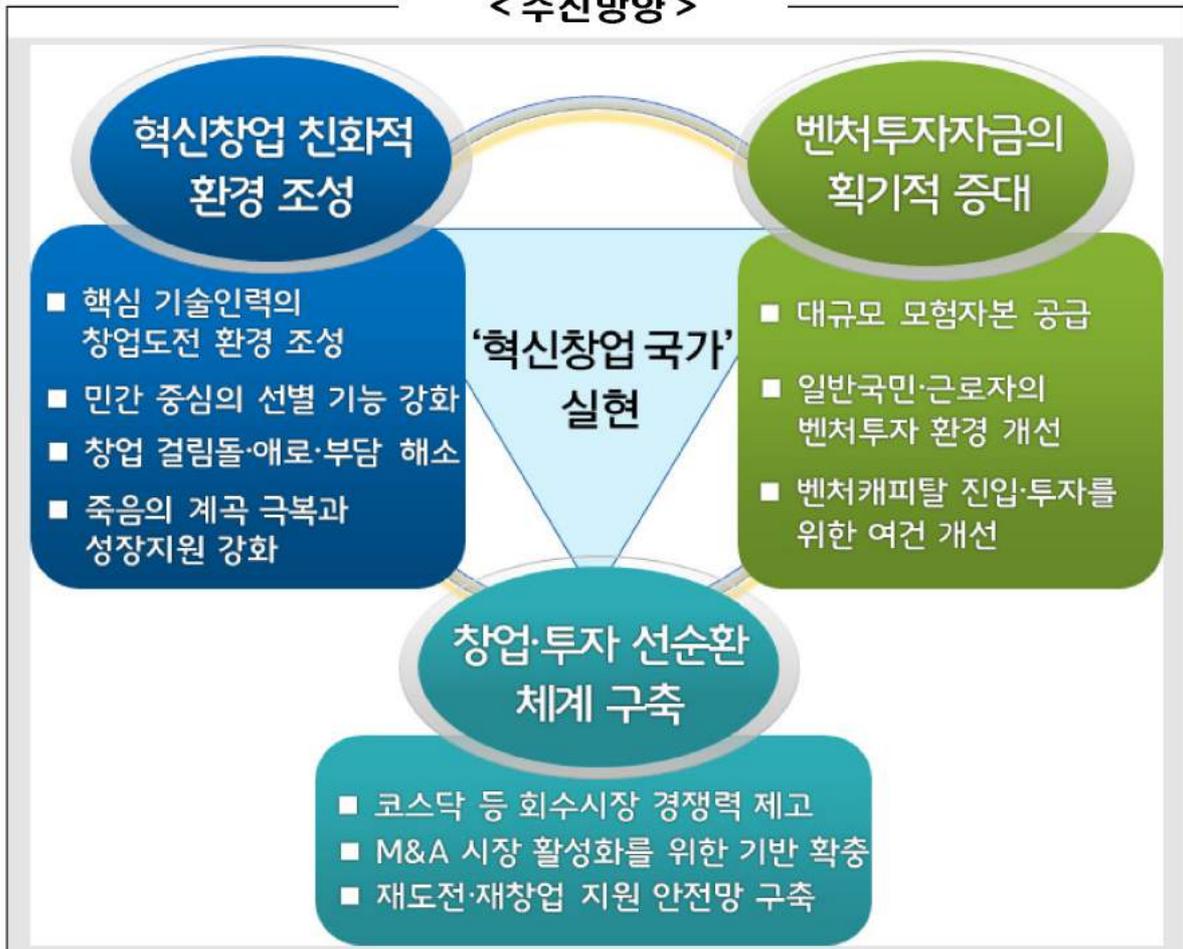
2. 추진방향

◇ **목표** :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 벤처·창업 국가” 실현

◇ 3대 추진방향

- ① 우수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혁신 벤처·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과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 ③ 「창업 → 실패 → 재도전」,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3. 세부 추진과제

1 혁신 벤처·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기업·대학·출연연구 우수인재들의 **質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

1]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 (창업실행)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 사업화자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 (창업이후) TIPS 방식 R&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분사창업 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 (모기업-정부간 협약)하고, 분사창업기업에도 **세제혜택*** 제공

*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대학·출연연구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

- 교수·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창업 장려를 위해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 **휴·겸직 가능기간·조건 완화*** 유도

*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휴직 시 별도정원 인정, 대학의 휴·겸직 인정기간 확대 등

- 창업실적 등의 **지표를 대학(LINC⁺)·출연연구(산업기술형)·공공기관 평가에 확대반영***하여 창업을 권장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재정지원 평가)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정성지표 중 창업부문 비중 확대 (예시 : 3%→5%)

(출연연구 평가) 창업지원규정 신설·개선시 출연연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부여 추진

□ **팀창업 · 재창업 · 사회적기업 창업 등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

- 다른 분야·배경 출신 인재들의 **융합형 팀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 창업정책(TIPS 등) 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및 자금지원 우대**
-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 *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 **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 (‘17년) 127(신설) → (‘18년 예산) 148
- 소셜벤처 등 **사회적가치** 기반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태 펀드內 **임팩트(Impact) 투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설

2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

-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벤처 확인위원회*)**로 **이양,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 선별력 강화**
 - * 선배벤처·벤처캐피탈 등 전문가로 민간위원회 구성
-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유형 개편**
 - **대출·보증유형 폐지** →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
 - **벤처투자유형 투자자 인정범위 확대(6개 유형* 추가)**
 - *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기술지주회사, 개인투자자(엔젤매칭 투자 시) 등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조직 인정범위 합리화(3개 인프라* 추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 **벤처기업 진입규제 철폐 및 신청기업 중심 벤처확인 운영**
 -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폐지(단, 유흥 및 사행업종 5개는 유지)**
 - **벤처기업 규모제한을 완화하여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TIPS 방식 정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지원 제도 전반으로 **확산**하여 창업·벤처정책의 효과성 제고
 -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우선 적용
-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창업기업의 투자자·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TIPS 운영과정에서 기업참여 확대 **검토**

③ 창업 걸림돌·애로·부담 해소 (부담금·조세·입지)

□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세금부담 경감

-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22년)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대상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 (1단계 : 종류·업종확대) 現 12종 → 15종, 지식서비스업 포함
 - (2단계 : 기간확대) 現 창업 5년내 제조업 → 창업 7년내 제조업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현행 3배) 중과 면제
 - * 재산세 : 창업 5년내 50%감면 → 창업 3년내 100% 감면, 4~5년내 50% 감면 등

□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22년 350개), 전문랩(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신보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 **판교밸리 조성과 국유재산·공공기관을 활용한 혁신창업 공간 확충**

- 현재 진행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 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수준의 **혁신모델로 선도개발**
 - * 43만m² 규모, 창업초기·벤처기업 1,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
-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통해 창업기반 확충 지원
 -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시 일정부분을 **벤처집적시설·창업보육센터** 등으로 할당
-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면서, 도심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46개) 추진시 창업집적공간 조성**
 - * (예시) 서울시 종로세운상가 도시재생 → 17개 청년창업팀 입주 등 창업공간 조성

④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 **창업기업 성장단계 도약을 위한 패키지 지원 확대**

-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조기 확대**
 - * 사업모델 혁신,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R&D 등을 최대 2년간 1억원 지원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2배 확대***하고,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 집중지원****
 - * 지원기간 및 금액 : (현행) 최대 2년, 1억원 → (개선) 최대 2년, 2억원
 - ** 고부가기술 분야 지원비중(%) : ('17년) 15 → ('18년) 50 → ('20년) 70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

- 초기 창업기업의 조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전환**
 - * (현행)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소규모 계약에도 적용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英 등에서 운용 중

□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

- TIPS를 통해 발굴된 혁신창업 기업(5년간 1,000개) 중 혁신성·성장성 높은 **20개 우수기업**을 매년 별도 선발·육성
 - 양산 등 대규모 자금 필요시점에 최대 **45억원**까지 집중지원
- * 중진공에 민간투자연계 용자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기보 보증 연계
- **글로벌 벤처캐피털**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現 1.4조원) 추가 조성

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재정·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붐 확산**

1 **혁신기업 지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추가 조성**

- **주요국 수준***으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 혁신모험펀드 조성·투자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15년 기준)에서 ‘20~’22년 중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15년 기준 美 0.33%, 中 0.24%)
- 혁신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고, 모태·성장사다리 등 **공공펀드간 운영·투자 연계 강화**

□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마련**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연계 추진
 - * 신·기보 등의 보증 공급과 무보증 대출을 병행, 보증공급 확대 등에 필요한 자원은 재정에서 추가 출연 추진
-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 등에 **M&A·사업재편·외부기술 도입(buy R&D)·설비투자** 등 대규모자금 필요시점에 자금공급

□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민간주도로 혁신**

- 민간제안 벤처펀드에 매칭투자하고 규제를 대폭 폐지하여 민간 자금 유입촉진 등 **'18년 모태펀드 운용을 민간 주도로 개편**
 - * (사업방식) 연 2회 접수 → 수시접수로 민간의 펀드 결성수요에 적기 대응
 - * (출자방식) 정책목적성에 부합하면, 기 운용 중인 펀드에도 모태가 후행 출자
 - * (보수체계) 민간 자율적으로 관리·성과보수를 설계하여 성과 중심의 운용 촉진
 - * (지분이양) 민간출자자에 모태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 확대(20% → 최대 50%)
- **'18년, 8,300억원 출자 → 1조 6,240억원의 모태자펀드 조성** 예정이며, 먼저 6,180억원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사업 진행* 중
 - * 공고('18.2.21) → 60개 VC가 9,190억원의 모태출자 요청(3.14) → 서류심사 결과, 37개 VC 선정(출자요청 5,431억원) → 최종심사(4월말) 후 펀드 결성.투자 ('18.5~)
- 또한, 금년 **추경(3,000억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총 6,6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추가 조성 추진
 - * 창업초기펀드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 2,800억원, 일자리 매칭펀드 1,000억원 조성

2 일반국민·근로자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

□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 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18.1~)**

기 존		개 선('18.1~)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000만원	5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 기존에는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

□ **우리사주·스톡옵션에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창업자-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행)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 핵심인재들의 유입 촉진 및 성장과실 공유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3] 벤처캐피탈 진입·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同一행위·同一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 벤처법·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

-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

- (투자주체) 창업투자회사 설립시 납입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50억원 → 20억원)

- (벤처펀드) 민간자금만으로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 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규정 폐지

-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 촉진**
 - 창업투자 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토록 완화
 - *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 투자 불가능, 창업투자조합은 투자 의무 충족 후 40% 이내만 해외투자 가능
 - 벤처투자조합의 타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으로 **민간 자율적인 모펀드(Fund of Funds) 설립** 가능 근거 마련
 - 창투사의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 PEF) 결성·운용 허용**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 창업초기 기업 투자에 적합한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SAFE*) 도입**
 -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 지분취득 권리를 부여한 투자방식,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을 결정
 -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 7년내 투자 기업에 대한 **7년 이후 후속 투자도 창업투자**로 인정
 -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대상 업종을 대폭 완화**(투자금지업종 열거 → 사행성, 미풍양속 저해만 포괄적 금지)
- 유사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 모태펀드가 미출자 **민간주도 투자조합**에는 **규제적용 최소화**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자유로운 진입·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창투사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자본금 요건	50억원	20억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국가 자격증, 학위 소지자	창업·투자 경험

- 현재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포함) 결성***을 허용

* (현행)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만 결성 가능

3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투자→회수→재투자”를 위해 코스닥·M&A 시장 활성화, “창업→실패→재도전”을 위해 안전망 확충·재기지원 강화

1] 코스닥 등 회수시장 경쟁력 제고

□ 코스닥의 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분리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
 - 명망 있는 외부전문가로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 본부장은 코스닥위원회 구성에서 제외
 -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 (7인 → 9인)

현 행 (총 7명)	개 선 (총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위원장 (= 코스닥본부장 겸임) ■ 금융위·중기부 추천 ■ VC협회·코스닥협회·변협 추천(3) ■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위원장 (= 코스닥본부장 겸임) ■ 금융위·중기부 추천 ■ VC협회·코스닥협회·변호사협회 추천(3) ■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 (예)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대표 추천

-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 강화**
 -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

- **상장심사 및 폐지 소위 구성원에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확대** 하여 소위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 제고
-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 요건**을 신설
 - ①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 **폐지**
 - ②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 ③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現 최대 30%)

□ 연기금과 대형 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 면제**
 - *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자금 확충 등에도 기여
-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플 운용 효율성 제고** 추진
 -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5점)을 **확대**
 -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 **기관·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

□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코스닥 벤처펀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운용규제 완화)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 허용
 - (조정기간)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을 각각 6개월 설정
- * 펀드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운용규제를 충족하면 되고, 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용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간 조정기간 부여

구분	현행	개선
투자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신주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신주에 15%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35%

- (공모주 우선배정)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
- * 현행 공모주 배정 비중 : (우리사주)20%, (일반투자자)20%, (하이일드)10%, (기관)50%
→ 개선 : (우리사주)20%, (일반투자자)20%, (하이일드)10%, (코스닥 펀드)30%, (기관)20%
- (세제혜택)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 부여
- *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투자한도는 없음

2]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 제재 강화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사·처벌 강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및 지방 기술보호지원반 설치 운영
- * 중기.산업부, 특허청.공정위, 검.경찰 참여 중앙 TF와 특허청 지식센터, 지방경찰청 참여 지역 기술보호지원반 가동(구성 및 TF kick-off 회의(5월), 운영(5월~))
- 중소기업기술 침해 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행정조치 도입

- 기술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하도급법에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적용 → (개선) 하도급법, 상생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

□ **대기업 등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 대기업의 M&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3년→7년)

- 중견·대기업 등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현행)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 → (개선) 삭제

③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전망 강화**

□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 완화**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 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18.4.2~)

-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 없이 연대보증 폐지**

- 연대보증을 적용받고 있는 「**既대출·보증기업**」은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되, 심사통과 시 폐지하고 미통과가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

-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폐지**

* (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

-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도 **연대보증을 폐지**

-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면제 이행 여부** 등
 저기저 저거

< 연대보증 폐지 계획 >

창업 7년 이내 ← → 창업 7년 초과

보증부 대출	보증기관 (산기보 자신보)	85% (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폐지("18.4.2)
	은행	15%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정책자금대출	중진공	100%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폐지("18.4.2)
신용대출	은행	100%	연대보증 입보 가능	

-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18.3.16)**

* 은행권-보증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15%의 신용대출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추진

□ **사업실패시 재산압류 · 신용정보 · 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 완화

* (현행) 개인파산시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월 150만원 × 6개월)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 (개선) 1,080만원으로 상향(월 180만원)

- **재기사업자***의 경우, **연체 · 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 및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제한**하여 신용회복 지원

* 신 · 기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사업 대상자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 · 취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소액체납 납부의무 면제제도** 한시시행

□ **재도전 · 재창업 지원 강화**

- 재도전 · 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

*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위이 이전에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위반 경중 및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성실경영평가에 탈락하였으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절차** 보장
 - **5개 평가기관*** 중 하나에서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효력을 인정**하여 사업신청시마다 평가를 받던 **불편함** 해소
- * 중진공, 신보, 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결성·집행, TIPS 방식의 민관 합동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재창업 지원기회 확대
- * 폐업 사업주 등에 대해 60% 이상 투자

II.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
 -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
 -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이 가능**
- 우리나라는 '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현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
 - 특히 새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범부처 종합대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17)'*** 발표

*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6대 진출확대 분야에 **소셜벤처 선정**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분 (시행)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농협·수협·생협· 생협 등 특별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16末)	1,713개	10,640개	1,149개	1,446개

- 그간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초점을 둔 정책은 **부족**
 -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성장성**을 강화 한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차별화와 특화 추진**이 시급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하나의 축으로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할 필요

[참고] 소셜벤처의 개념과 성공사례

□ 개념

- 소셜벤처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일반적으로 의미
- 법령상 **확일화 된 인증·확인절차가 불필요**하므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업화

<해외 소셜벤처 개념(법적 정의 등은 없음)>

- (영국)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또는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투자자의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기업(NESTA, '15년)
- (미국)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 실패를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 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비즈니스 벤처(Virtue Ventures, '05년)

□ 성공사례

	<p>(혁신) 자동차폐가죽시트, 에어백 등을 활용한 가방, 지갑, 신발 등 제조('16.1월 벤처기업 확인)</p> <p>(사회성과)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폐가죽 시트 처리비용 월 1,000만원 절감(환경보호)</p>
<p><모어댄(韓)></p>	<p>(경제성과) '17년 매출 335백만원, 독일, 영국 등 3만 달러 수출</p>
	<p>(혁신) 저가의 점자디바이스용 스마트워치 개발 (평균 수백만원 → 약 30만원)</p> <p>(사회성과) 시각장애이용 저가 전자정보 단말기 판매와 저개발국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으로 문맹률 및 디지털 격차 해소</p>
<p><닷(dot)(韓)></p>	<p>(경제성과) 제품출시 전 선주문 350억원, 총 102억원 투자 유치</p>
	<p>(혁신) 저가의 족동식 펌프 개발(약 95불)</p> <p>(사회성과) 아프리카 농민에게 저가 펌프 판매와 농작물 재배 컨설팅을 제공, 연간 1천2백만명이 기아에서 해방</p>
<p><킵스타트(美)></p>	<p>(경제성과) 총 21만명 고용 창출, 연간 2억불 매출 창출</p>
	<p>(혁신) 인공수정체, 보청기 등 의료용품 제조업체, 저가 인공수정체 개발(평균 150불 → 10불)</p> <p>(사회성과) 아라빈드 안과 병원과 협력하여 인도 저소득층 시각 장애자에게 저가의 인공수정체를 제공</p>
<p><오로랩(인도)></p>	<p>(재무성과) 세계 시장점유율 2위, 비용 30%를 이익에서 창출</p>

2.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현황

1 소셜벤처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업가 양성 저조

- 소셜벤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가 미흡
- 사회적 기업가 양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목적 분야의 창업 초기활동(TEA)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국내 창업초기활동에서 '건강·교육·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13.6%로 미국 19.7%, 영국 19.4%, 독일 29.0% 등에 비해 낮은 수준(GEM, 2016)

2 소셜벤처 생태계가 자생하고 있으나 성장기반은 열악

- 서울 성수동*에 소셜벤처 활성화 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투자자 연계 미흡 등으로 본격적 성장 거점으로는 아직 부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 창업지원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소셜벤처·사회적 혁신가 등 180여개 기업, 3천여명이 모여 소셜벤처 밸리를 형성

- 소셜벤처의 창업·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개지원 기관은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K 행복나눔재단,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투자 등

- 광고비 부족·취약한 영업망·판로개척을 위한 정책지원 부족 등으로 소비자 접근성 및 민간부문 수요처 확보가 제한적

3 임팩트투자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도 미활성화

-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주요 자금 조달 源인 임팩트투자*는 세계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 '15년말 기준 국내 누적 투자규모는 약 540억원(사회영향투자 동향과 전망)

<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 추이(연간) >

구분	2014	2015	2016	2017(예측)
투자규모(백만불)	10,553 (약 10.5조원)	15,231 (약 15.2조원)	22,142 (약 22.1조원)	25,905 (약 25.9조원)
투자건수(건)	5,404	7,551	7,951	9,557

자료: GIIN,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각 년도

- 임팩트투자 부족 등으로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 목적(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도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 접근성 전반을 제약
 - 사회성과 평가모형이 발달한 선진국*과 달리 **벤처투자, 금융기관 등에서 보편적 활용가능한 사회성과 평가모형 부재**
 - . GIIN의 임팩트투자표준(IRIS), B랩의 사회적기업 평가모형(GIIRS), REDF의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지표 등

4 사회적경제기업 대비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

-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소셜벤처의 개념 및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지원정책 수혜 시 **상대적 불리성이 작용**
 - 소셜벤처를 **미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
 - * 일자리 제공형(69.7%), 사회서비스 제공형(6.3%), 혼합형(10%) 등으로 분류 ('16년 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
 -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성장 초기단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셜벤처를 집중 발굴·지원할 필요***
 - * 정책수요 실태조사('17.12, 중기연): 안정적 단계에 진입한 기업 성장 촉진(35.9%) > 전반적·범용적 지원(27.1%) >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 지원(22.0%)
- 소셜벤처 대상 **특화 지원수단·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 기반이 되는 **통계, 실태조사 등의 행정자료도 부족**

3. 해외의 소셜벤처 육성 정책

- (영국)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과 **중개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핵심으로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
 - (자금) 민간 임팩트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성과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도 운영
 - * Big Society Capital : 총 6억 파운드 규모로 국내 모태펀드처럼 민간 임팩트 투자 운영기관에 시드머니를 투자(출자, 지분참여 등)
Investment & Contract Readiness Fund : 임팩트투자 계약에 대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사회적기업에 총 4억 파운드 규모의 용자 지원
 - ** the Social Outcomes Fund : 총 6천만 파운드 규모로 내각사무처 사회성과채권센터를 통해 사회성과채권 발행 및 사업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중개지원기관) 임팩트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소셜벤처 투자운영기관(NESTA),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 사회성과채권센터 등을 설립 또는 운영
 - (정책기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2년 주기)를 실시하고, **소셜벤처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 소셜벤처 창업 가이드선스 발표('15), 혁신형 소셜벤처 투자 실천가이드 발표('15) 등
- (미국)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협력의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활성화**
 - '13년에 '국가 임팩트투자 이니셔티브(NII)'를 출범하고, 소규모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임팩트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
 - * 글로벌 개발혁신 벤처투자 강화(매년 2천5백만 달러), SBIC 임팩트 펀드 공급(연간 약 2억 달러) 및 사회혁신펀드(연평균 4천5백만 달러) 확대 등
 - 미국 중소기업청 등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4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소셜벤처의 사업화, 멘토링** 등에 자금을 지원

□ 호주, 캐나다 등도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및 중개지원조직 설립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 중

○ (호주) '사회적기업 발전 및 임팩트투자 펀드(SEDIF)'를 조성하고 투융자 및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10년부터 총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3개의 펀드 운영사를 통해 보조금과 융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

○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대기업과 함께 임팩트투자 거래를 연계하는 중개지원기관 SVX(the Social Venture Connexion)를 운영

* '11년부터 100개 이상의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1억 달러 이상의 임팩트투자를 연계

<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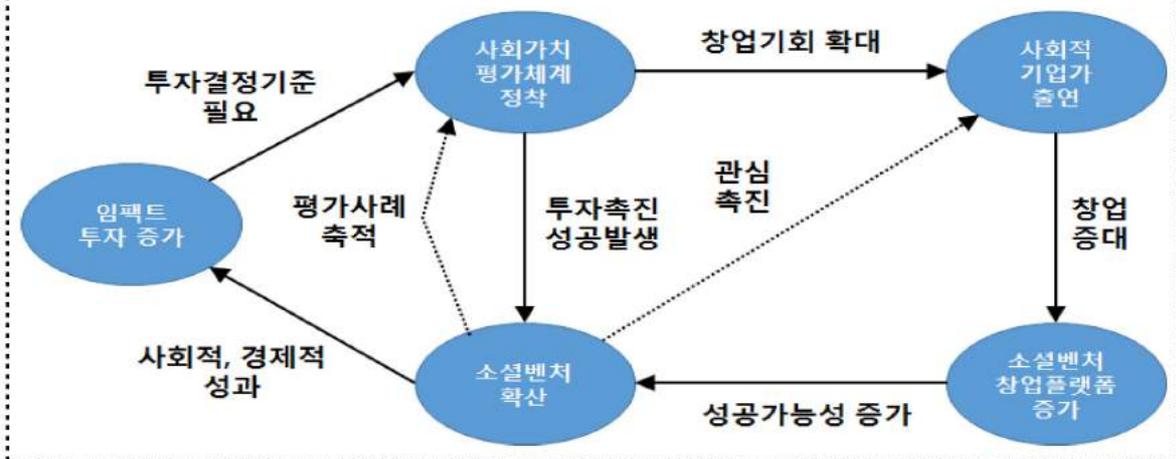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시드머니를 통해 임팩트투자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셜벤처의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유도

○ 임팩트투자 증가로 '사회가치 평가체계 정착 → 사회적기업가 출현 →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증가 → 소셜벤처 확산'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17년, EU) :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사회가치 측정 방법론 개발, 공공구매 기회 확대 등

○ 임팩트투자 운영기관,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등 민관 협력의 중개지원조직이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적극 투자

< 소셜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



4. 추진 방향 및 과제(안)

◇ **목 표** :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산**

◇ **중점 추진방향**

- ① 민간 주도로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가치평가모형 활용촉진 및 정책기반 조성을 통한 **소셜벤처 확산체계 구축**
- ②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과 R&D 및 유망 사업분야 진출 지원을 통한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③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확대와 판로지원 확충 및 기술개발·자금·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셜벤처 성장 촉진**
- ④ 소셜벤처의 롤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성공모델 및 문화 확산**

1] **(확산체계 구축)**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판별기준, 평가체계 및 정책기반** 등을 조성

- 소셜벤처 여부 판단을 위해 민간주도로 **최소한의 판별 기준을 마련**, 지원대상 선별 및 자가 진단 등에 활용
- 우수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임팩트투자·보증·음자** 등 사업화 지원을 촉진하는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설립** 추진
- 관계 부처(고용부 등) 합동 **소셜벤처육성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2] **(창업·성장 촉진)** 다양한 분야의 소셜벤처 창업 유인 및 유망 소셜벤처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 ‘**소셜벤처 창업기획사**’ 선정, 지역별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공동업무 공간 제공** 및 **소셜벤처간 협업 프로젝트** 등 지원

- 모태펀드에서 출자(80%)하여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임팩트 투자 펀드' 조성
 -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50% 이상)하는 TIPS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
 - * 고용부(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과기부(사회문제 해결형 R&D) 등
 - 유망 소셜벤처에 대해 R&D, 자금, 판로 등을 후속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일관지원 체계 구축
 - * (분야별 지원사업) (기술) 창업기업 R&D, 산학연 R&D, 제품·공정개선 R&D, (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수출) 수출성공패키지 등
- ③ (성공모델·문화확산) 청년 소셜벤처 성공사례 창출·확산을 위한 구심점(HUB)을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
- 서울 성수동·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자원을 연계·집중하여 성공사례 창출·확산의 허브로 육성
 -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교육 확충, 소셜벤처 기업가 포상·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 토론문 1 ·

소상공인 관련 이슈 해법 모색 ‘현장을 중심으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 관련 이슈 해법 모색 - 현장을 중심으로 -

전순옥(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1.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관련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조직 필요성에는 동의, 그러나 현장의 협동조합 운영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 현 협동조합들의 모습은 공동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본래적 의미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업체들이 그저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
 - 협회 설립의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함.
 -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의 실질적 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협동조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함.
- 외국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설립 자체가 매출증대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 정부와 민간·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협력, 행정·법률·세무 등에 대한 지원, 금융·교육·연구개발 등의 바탕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수준의 협동조합 운영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의 소상공인종사자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육성 및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바람직한 한국형 협동조합 모델 마련이 필요
 - 성공사례 : 양천가방협동조합

2. 소공인 제조업 분야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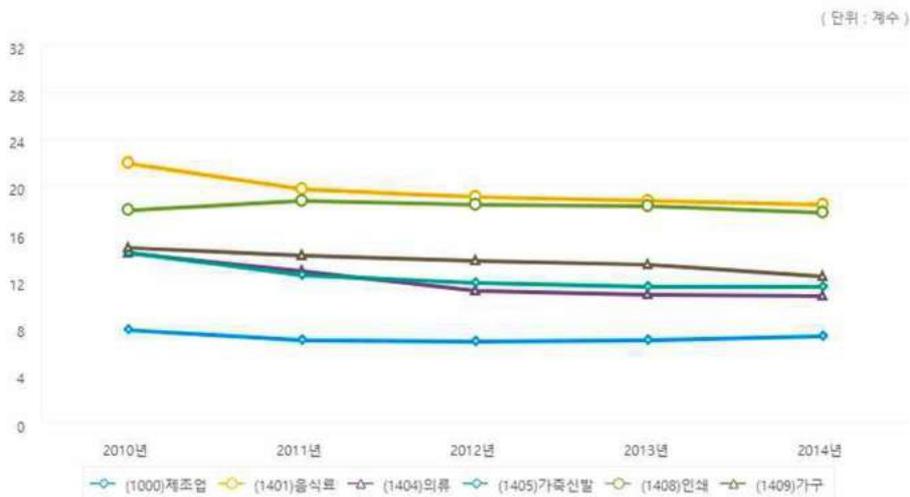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종사자수 증가율
 - 한국은 2014년 기준 가장 많은 소공인 종사자 보유
 - 소공인 산업 종사자수 증가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6.61%)는 영국(2.63%)과 함께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연평균 고용성장률이 상향추세인 국가에 해당

(단위: 명)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덴마크	23,237	22,608	22,144	21,299	21,533	(1.89)
핀란드	28,170	27,386	25,919	24,783	24,437	(3.49)
프랑스	446,954	320,182	342,147	352,687	275,813	(11.37)
독일	373,957	365,252	373,088	374,510	362,213	(0.79)
이탈리아	497,796	505,761	484,131	472,884	468,862	(1.49)
일본	-	545,430	510,878	488,180	-	(5.39)
한국	856,709	921,091	945,892	1,038,040	-	6.61
네덜란드	68,252	64,933	64,402	67,334	63,846	(1.65)
노르웨이	20,771	20,324	19,995	19,451	19,114	(2.06)
스웨덴	53,450	53,010	52,416	51,538	-	(1.21)
영국	228,862	222,375	229,606	221,546	253,915	2.63
미국	711,751	717,151	705,035	705,930	700,679	(0.39)
평균	-	-	-	-	-	(1.71)

자료 :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ISIC Rev. 4)

- 취업유발계수(2014년 기준) : 제조업 7.34, 의류 10.73, 가죽신발 11.57, 인쇄 7.88, 가구 12.38, 음식료 18.52



- 숙련된 제조 기술력,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독창적 아이디어(디자인력)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묶어내기만 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소공인 제조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소재산업(섬유, 가죽, 신소재 등)과 도·소매 수출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국가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소공인 사업체 수 약 35만개(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에 사업체당 필요 인원 수 1.5명(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3.15. 소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보도자료)을 계산하면 약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관점의 변화가 필요
 - 개별 업체에 대한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공인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타 경제주체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3. 기타 소상공인 관련 현안

-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 노동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의 충돌 문제 해결
 - 소상공인의 최저소득 보장 및 이를 위한 소득 증대방안
-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 소공인 제조 기술 분야 신규인력 유입의 어려움
- 라벨같이 근절 대책 관련 등

· 토론문 2 ·

소상공인의 희망,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정창윤 한국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이사



소상공인의 희망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맥도널드 본사는, 왜?
가맹점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을까?

정창윤

(협)한국협동조합중앙회경영지원센터 /이사
(주)골스프랜차이즈 /이사
보리네협동조합 /이사장
(주)다담 /고문

INDEX

- 우리나라의 현황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 정책제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현황

5,000여 브랜드, 치열한 경쟁,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우리나라의 현황

치열한 경쟁 속 프랜차이즈

보리네 협동조합

- 5,000여개 브랜드
- 가맹점수 100개 이상 10% 미만
- 가맹점수 50개 미만이 약 80%
=> 양적성장 vs 내실?

가맹점수 1000곳 이상인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단위: 개, 명) ●는 2016년 중앙벤처협회 지정모집대상 기업

브랜드명	업종	점포수	본사 인력	본사 평균편입액	브랜드명	업종	점포수	본사 인력	본사 평균편입액
모닝쿼터마켓	편의점	7271	1200	6.5	본아이베트	와시	1325	225	4.1
GSS25	편의점	6500	1100	7.0	두산주공	와시	1300	1000	5.5
세븐일레븐	편의점	6200	1300	6.0	아미마을	회생동	1280	2300	3.0
파라바게트	와시	3100	11,500	7.5	한솔플러스수학교실	교육	1226	43	-
●해법영어	교육	3029	153	-	지앤이영어전문학원	교육	1200	150	1.0
투더리	와시	1900	150	3.0	●자자영어전문학원	교육	1183	878	-
아이북랜드	교육	1850	140	1.0	정민강	건강식품	1102	1533	1.0
BBQ	와시	1800	550	4.0	에스넷	교육	1100	28	1.5
미니스톱	편의점	1775	560	6.5	네네치킨	와시	1050	50	3.5
크린토피아	세탁서비스	1705	150	1.5	롯데리아	와시	1032	900	16.7
YB&R빙글빙글	교육	1500	380	1.0	영광리우무	교육	1010	100	2.5
●온누리약국	약국	1439	78	-	메디움	약국	1008	19	2.5
블루윈즈	자동차정비	1417	772	5.2	●메릭스해발수학	교육	1008	878	-
패리커나	와시	1400	11	-	*블루윈즈는 381개 공영점 가맹점사는 본점 근무인력이 19명임				

규모	2014			2015		
	빈도 (개)	비율 (%)	누적비율 (%)	빈도 (개)	비율 (%)	누적비율 (%)
10개 미만	1,865	49.8	49.8	2,651	52.6	52.6
10개 이상 ~ 20개 미만	544	14.5	64.3	642	12.7	65.3
20개 이상 ~ 30개 미만	305	8.1	72.4	366	7.3	72.6
30개 이상 ~ 50개 미만	322	8.6	81	357	7.1	79.7
50개 이상 ~ 100개 미만	289	7.7	88.7	295	5.8	85.5
100개 이상	332	8.9	97.6	336	6.7	92.2
결측	91	2.4	100.0	397	7.8	100.0
전체	3,748	100.0	100.0	5,044	100.0%	100.0

어려움 속 프랜차이즈

보리네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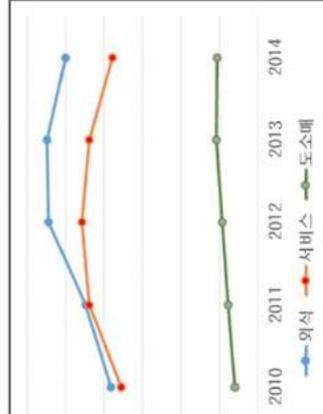
- 높아지는 폐점율
- 본사 -가맹점 분쟁 증가

<2017년 분영 조정 점수 - 처리 현황>

구분	점수 현황		처리 현황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합계	2,433	3,354	2,239	3,035
일반부동산거래	50	954	482	853
가맹사업거래	593	779	31	750
비부동산거래	1,890	2,621	1,726	2,432
대규모유동거래	42	35	36	34
약관	115	133	110	120
테리점거래	-	27	-	6



프랜차이즈업종별 가맹점 백업수



자료: 메세스컨설팅(전주)·서울경제연구원(2015)

우리나라의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 12. 1)

보리네 협동조합

-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그 동안(1961~2012) 우리나라의 법인형태에서 협동조합은 선택지에 없었다.
- 협동조합은 소규모사업자들의 연대를 통한 사업규모화의 시너지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 특히, 프랜차이즈업종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17년 시범사업
 - 2018년 사업진행 중
 - 일부 자부담 정부보조금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유형 중 - 프랜차이즈
 - 지원한도 5억원
 - 공동 장비, 공동사업(마케팅, 개발, 네트워크,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 일부 자부담 정부보조금

우리나라의 현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요약

보리네 협동조합

구분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아이템 개발자	로열티/아이템 판매대금	로열티/아이템 판매대금
프랜차이즈 본부	투자자소유 주식회사	조합원(=가맹점)소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	창업희망자(=>조합원)
본부-가맹점 관계	본부와 이해관계 충돌 (공급품의 가격인상 등)	본부의 이익 = 가맹점의 이익
장점/단점	투자자금 확보 용이 / 불신비용	상호신뢰 / 투자금 열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1. 본사와 대립적인, 가맹점들의 도전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1. 본사와 독자적인 가맹점들의 도전

보리네 협동조합

본사를 이탈한, 가맹점들이 도전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 쿵스치킨 (을살리기새희망협동조합)
- 피자연합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1. 본사와 독자적인 가맹점들의 도전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을살리기새희망협동조합 - 콥스치킨

대기업 횡포 진저리... '치킨 협동조합' 뚝다 (한겨레)

콥스치킨은 막 홍보물 제작을 끝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콥스치킨 1호 매장은 민호씨가 운영하던 치킨 집 간판을 바꿔 단 뒤 영업.

그는 자영업자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치킨 산업 생태계'를 바꿔보겠다는 거창한 계획도 세웠다. "콥스치킨 조합에서 많은 점포를 확보하면 가맹점주를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골적으로 점주들을 쥐어짜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1. 본사와 독자적인 가맹점들의 도전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을살리기새희망협동조합 - 콥스치킨

사업설명회 통해 가맹점=조합원 모집



UHC 콥스치킨
thcoop's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공입니다!!

사업설명회 초대

협동조합 콥스치킨 사업설명회에 초대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님, 임종진관, 브렌드 변경을 검토하시는
사업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일시 : 2014. 10. 6(월)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 삼성빌딩(I-Coop 생협건물) 2층
3. 설명회 회순
1) 사업지협동조합의 이해 (한국협동조합창업지원센터 정창운이사)
2) 콥스치킨 사업설명회
3) POS 과 연계한 배달광고어플 개발(개발업체 심성영대표)
4) 격려사(인권,공익 '사단법인 선' 김성진 상임변호사)
5) 콥스치킨 시식회

을살리기 새희망협동조합
UL NEW HOPE COOPERATIVE ASSOCIATION

www.uhcoop.com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새로운 협동조합(형) 가맹본부를 창업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 베니키아호텔협동조합
- 동네빵네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베니키아 호텔 협동조합

The screenshot shows the Benikea Hotel website. The main header features a scenic view of the hotel and the text 'Benikea Best Night in Korea'. Below this, there is a 'Chain Hotel Overview' section with the following data:

Chain Hotel Overview	Statistics
Chain Hotel	47
Franchisee	3
Total Guest Count	4,286

Below the overview, there are two hotel listings:

- 베니키아 호텔 제주 크리스탈** (Benikea Hotel Jeju Crystal):
 - Add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16 (서귀포 316-4)
 - Phone: 064-752-8311 | Fax: 064-763-0512 | Email: 21cystal@naver.com
 - Website: www.benikea.com
- 베니키아 폴 아이비스테이 수원역** (Benikea Pol Ibisstay Suwon Station):
 - Address: 수원시 동양구 개령로 705번 9
 - Phone: 031-246-7799 | Fax: 031-246-8887 | Email: booking@ibishy.com
 - Website: www.benikea.com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베니키아 호텔 협동조합

사업의 종류와 특징

- ❖ 조합원(출자금, 조합비, 이용실적상계)
- ❖ 공동구매
- ❖ 공동마케팅
- ❖ 기타 (브랜드관리, 직영호텔 등)
- 사업의 내용은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하여 시행여부, 시행시기, 조합원 참여방법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베니키아 호텔 협동조합

사업의 종류와 특징 / 조합원

사업의 종류	내용	예상규모 (천원)	예상 수익 (천원/년)	비고
출자금	100만원 이상 출자	30,000	-	* 30개사 기준 * 평균 75객실기준 * 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조합 비 부담은 낮아짐.
조합비	객실수 × 20,000원 / 년	-	45,000	
조합비 상계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 실적 마일리지로 조합비 상계.	조합원의 사업참여 유도		

- 출자금 : 조합원 가입 시 필수 납입, 수시 증액가능, 감액 불가능, 출자금배당 한도 : 출자원금의 10%.
- 탈퇴(제명)시 증감된 지분에 따라 환급.
- 조합비 : 협동조합의 운영비 분담금. 매월(년) 납. 돌려주지 않음.
- 조합비를 객실 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취지는, 향후 협동조합의 사업들에 따른 수익의 크기가 객실 수에 비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동네빵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동네빵네 협동조합

1. 일반현황

2013년 06월 설립	조합원 11명의 개인사업자(동네빵집 운영) 출자금 1인당 10백만원 . 총 110백만원
2013년 10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자금 지원받음 설비자금 총 270백만원(자부담 51백만원 포함)
2013년 11월	신촌 현대백화점 입점 행사 진행
2013년 12월	신나는 조합 - 100백만원 차임
2014년 01월	동네빵네 협동조합 공장 오픈
2014년 02월	조합원으로부터 1인당 910만원씩 추가 차임
2014년 04월	신촌 현대백화점 입점 행사 진행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2. 새로운 협동조합 본사 창업

보리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동네빵네 협동조합

경영-본인 빵집을 유지하면서 상근경영자의 역할하기 어려움.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

조직비전 - 이사들의 1차적 이슈는 필요한 제품을 지금 당장 저렴하게 공급받는것.

장기 전망을 어떻게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내부관리 - 공장은 품질기준을 설정하면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

단, 수작업에 의한 공정이기에 자동화에 비해 생산성 낮음.

자본투하에 따른 자동화 공정이 가능할까? 자본은 어떻게 조달할까?

경기 및 외부 영향 - 2014년 세월호 시점 매출 축소

2015년 메르스 시점 매출 축소

2015년 10월 2개 조합원 점포 영업중단

2016년 신규 거래처 영입, 조합원 2개 점포 영업개시

경기 및 외부 영향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축적된 자본이 없어서 외부 영향이 조금만 있으면 경영 안정성 위태로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보리네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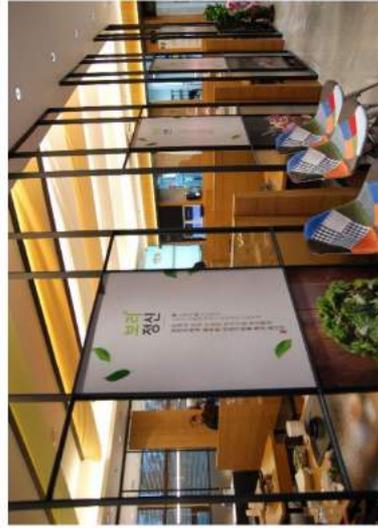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1. 보리네협동조합 소개

1. 보리네생고기집 소개 (전국 26개 가맹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1. 보리네협동조합 소개

2. 보리네협동조합 소개

(주)다담 손재호 대표는 가맹점주들과 공동 소유하는 보리네 협동조합을 설립해 회사 자산과 사업권을 넘기는 중이다. 2017년 8월10일에는 대전에서 7명의 조합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었다. 발기인들은 모두 가맹점주들이다. 각자 최소 2천만원씩 초기 출자금을 납입, 조합 설립 절차를 완료.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수의 가맹점주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국내 첫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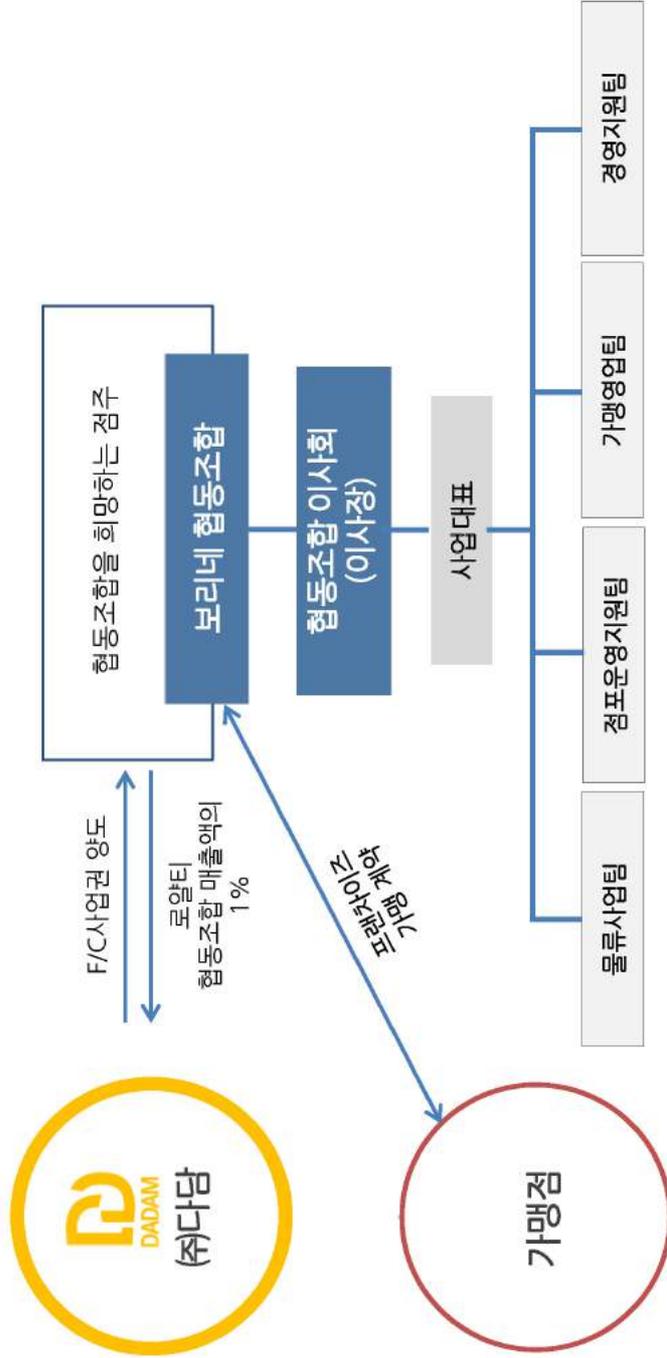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1. 보리네협동조합 소개

3. 조합원 구성 및 운영구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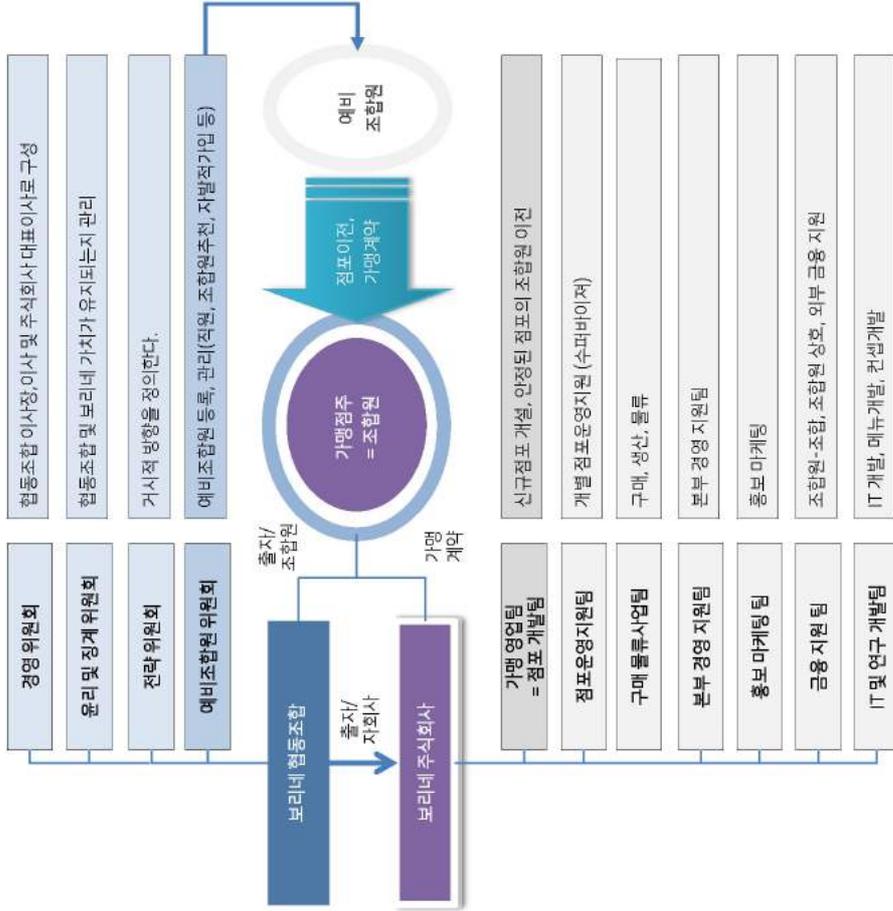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1. 보리네협동조합 소개



보리네 협동조합 & 주식회사 사업 및 지배구조(계획)

-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고,
- 주식회사는 점주와 그 고객을 위해 노력한다.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III. 보리네협동조합 운영방식

2.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 직원

- 조합원 매출성장과 비례하는, 협동조합의 매출액 성장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한도액이 늘어나는 보상체계를 마련
- 이를 통해, 열정과 능력이 있는 직원들의 협동을 통한 노력이 조합원에게만 성과로 가지 않고,
- 조합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또, 직원의 경우, 언젠가 가맹점 점주가 되어 조합원이 되는 길을 지원함.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III. 보리네협동조합 운영방식

3.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가맹점)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예정)

- 협동조합은 사업대표의 제안에 따라,
- 총회에서 BRP기금(보리네가맹점 리빌딩(Rebuilding) 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 이 기금은 조합원들의 출연과 협동조합의 출연 등으로 기금을 마련
-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리네 가맹점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투자, 이전, 재창업 등을 지원한다.
- 지원을 받아 다시 성공하게 된 가맹점은 투자에 대해, 장기 상환을 하고,
- 이후, 또 다른 가맹점에 BRP기금이 제공되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보리네협동조합 미래 모습과 계획

1. 브랜드 신뢰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주체(1)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보리네협동조합 미래 모습과 계획

1. 브랜드 신뢰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주체(2)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의 3가지 유형

3.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시도

보리네 협동조합

보리네협동조합 미래 모습과 계획

2. 자영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정책제안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을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한다.

1.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한다.

- 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공공 교육을 실시한다. - 공정거래, 경영교육 등
- 2)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설립교육, 설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3)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안내서 등을 발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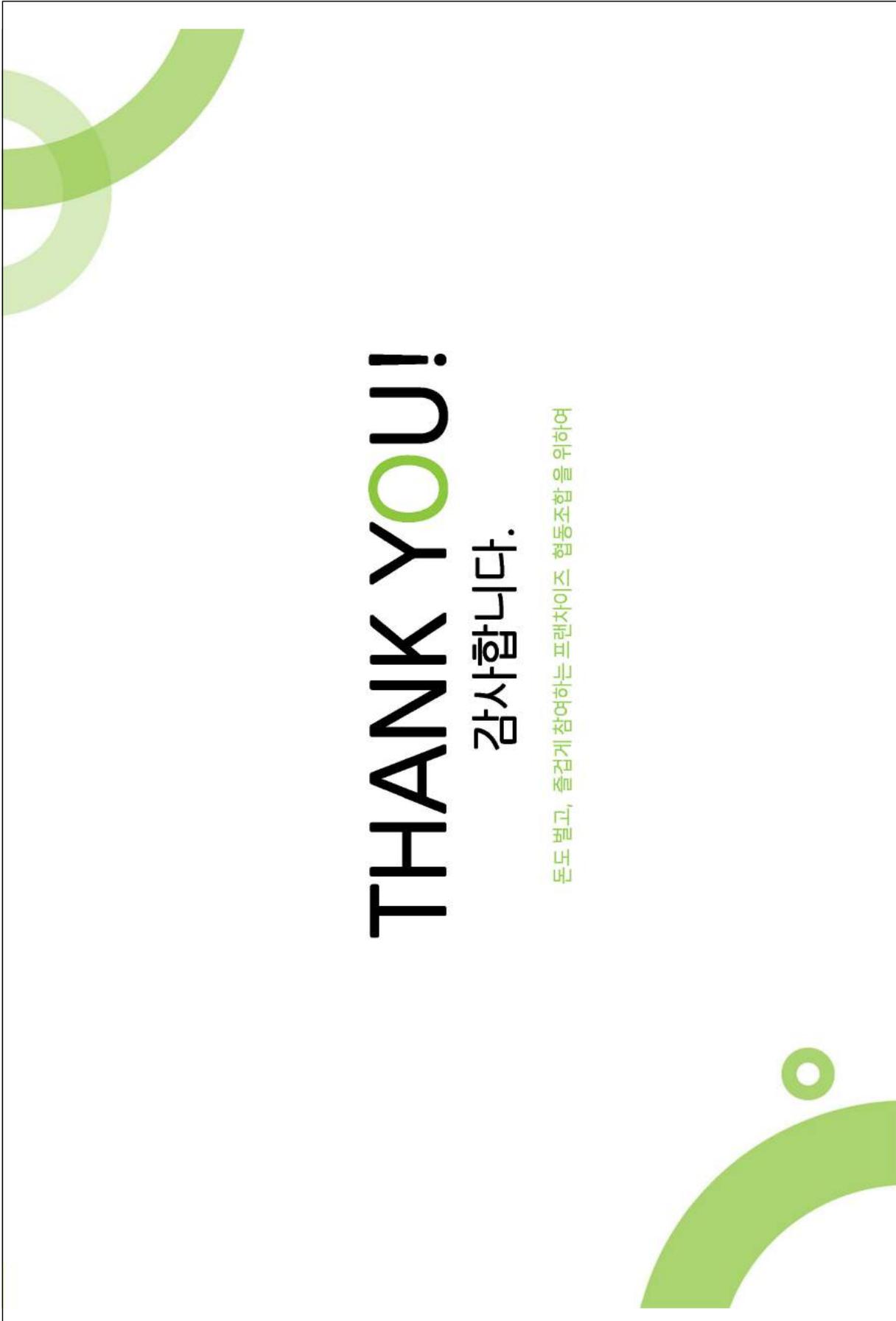
2. 공정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프랜차이즈 본부 중 공정성을 평가하여 인증제를 연구하여 실시한다.(예시)

- 1) 구조적 공정 단계(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가맹점 소유 본사 등)
- 2) 실체적 공정 단계(실적, 조사 인증 등)

3.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규모화를 지원한다.

- 1)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의 규모를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 2) 소규모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협동조합화를 유도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돈도 벌고, 즐겁게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위하여

· 토론문 3 ·

한국 소셜벤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정부정책방향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한국 소셜벤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정부 정책 방향 제언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토론배경]

소셜벤처 분야는 사회혁신생태계 (사회적경제분야)와 벤처생태계의 교차점에서 생성된 영역으로서, 지난 10년간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발전되어 오면서, 양 생태계의 주요 주체(Entity)인 사회적기업 혹은 벤처기업과는 차별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인식/존재되어 왔습니다. 2012년부터 소수의 임팩트투자자들과 소수의 청년소셜벤처기업가들이 교류하며, 생태계 구축 노력을 하였고, 2014~2015년 성수소셜벤처밸리를 민간 자본과 인재 중심으로 구축하고, 2016~2017년 공공 예산과 인프라가 뒷받침되며, 현재의 소셜벤처생태계로 정립되었습니다.

[토론주제 1. 소셜벤처 확산체계 구축]

“소셜임팩트(사회가치) 창출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까?”에 대해 해당 분야 선진국인 미/영에서도 최대한 유연한 측정/평가/정책을 바탕으로, 장단점과 기회/위험(한계)를 판단하고 정의해가는 중입니다. 한국 생태계에서 소셜벤처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가치인증기업”인 “사회적기업” 제도로 판별/평가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자/기업가들이 정의하며 확산한 형태로서, 현재 중기부 정책 방향인 “민간 주도/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주제 2. 소셜벤처 창업/성장 촉진]

소셜벤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1) 양질의 자금과 인재 등, 2) 지속적으로 (Patient, 인내하며) 공급하는 것입니다. 중기부 정책에 포함된 임팩트투자펀드, TIPS운용사선정, 소셜벤처엑셀러레이터육성 등 상당히 중요한 1) 양질의 자금과 인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서 생태계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2) 지속적으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에, 생태계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과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기재부(사회적경제)/금융위(임팩트금융)/중기부(소셜벤처)/고용부(사회적기업) 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된 장기 정책을 연계/통합해서 수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

생태계 역시 점차 특화/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계/통합에 대한 논의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주제 3. 소셜벤처 성공모델/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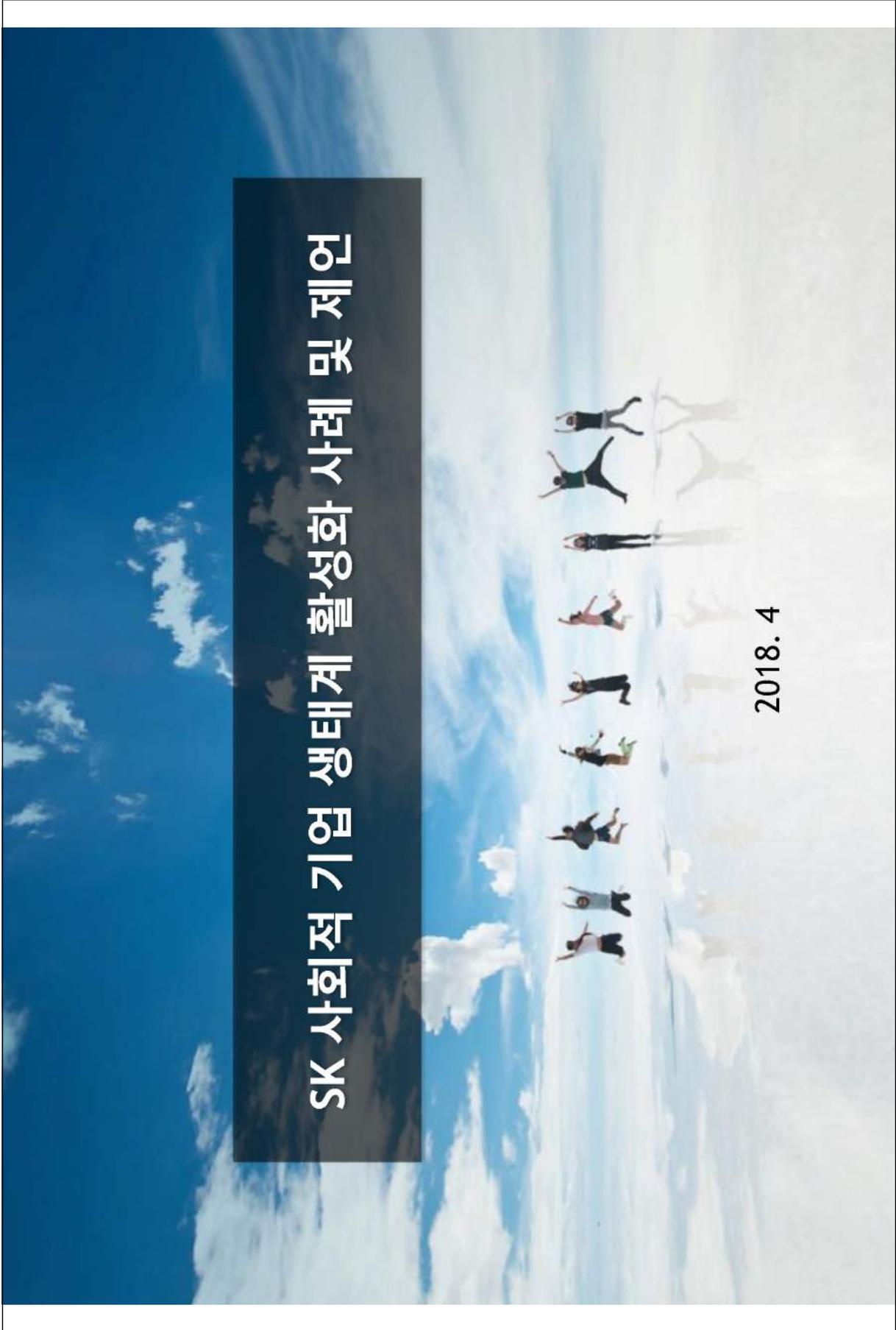
소셜벤처의 성공은 일반벤처나 사회적기업과는 그 철학과 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통해서, 2) 시민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사랑받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실마리는 일부 찾았으나, 아직 규모와 품질 (양과 질) 있는 임팩트 창출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성공을 만들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도전과 정부의 인내있는 지지/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공모형이 갖춰지면 관련 문화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토론문 4 ·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및 제언

서진석 행복나눔재단 SI 그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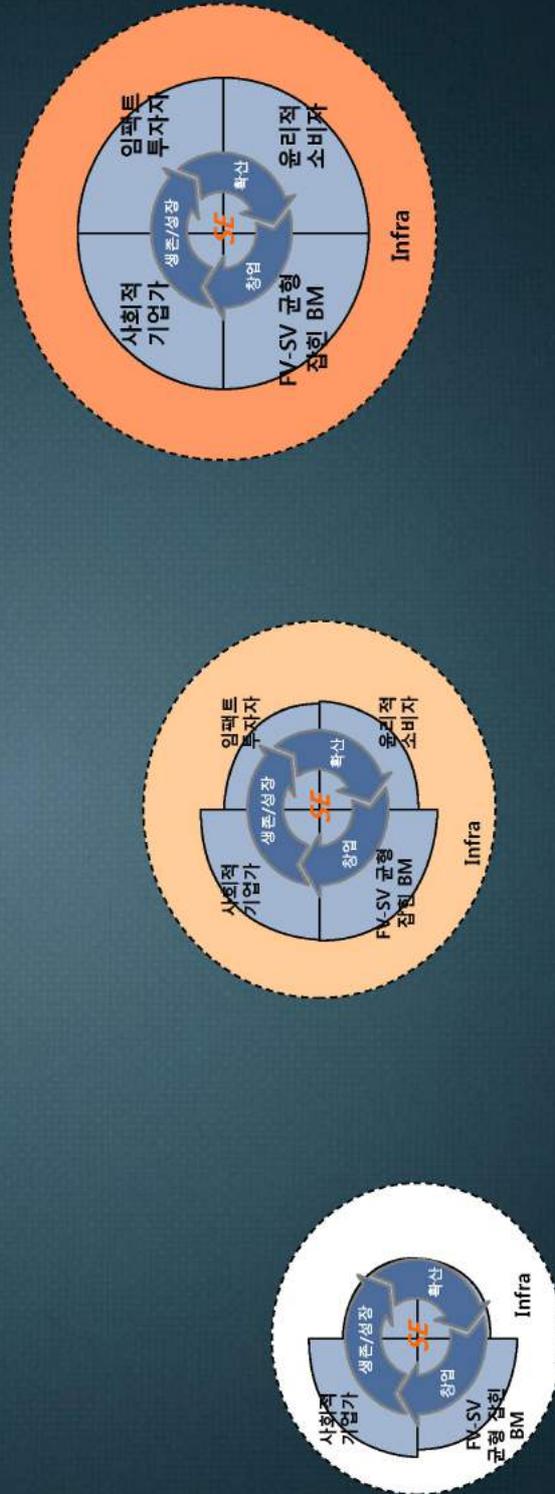


SK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및 제언

2018. 4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진화 단계

정부/NPO 의존 단계, Infra 형성 단계를 거쳐 자발적 Player 확산 단계로 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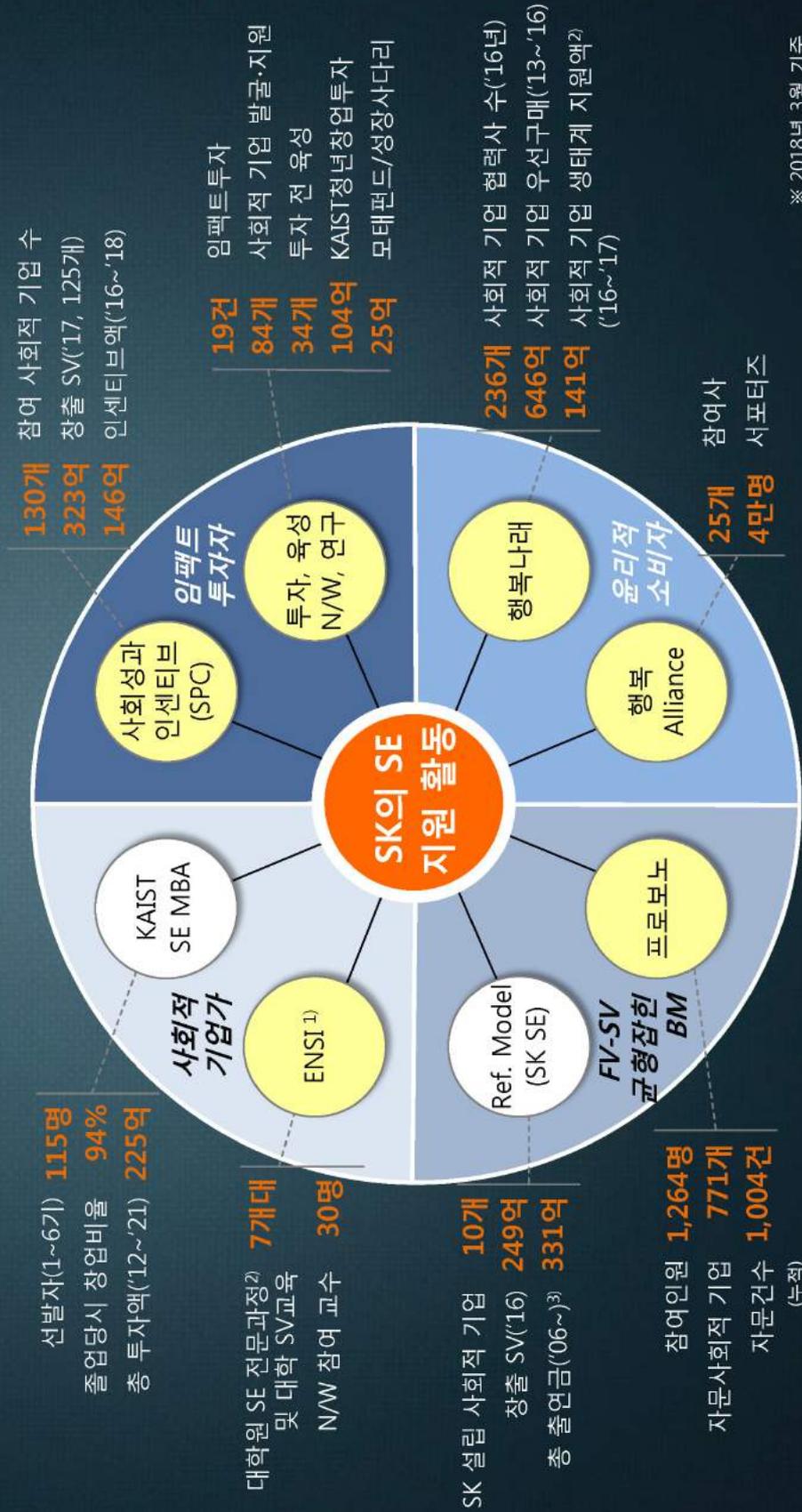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생태계 Pain Point

인재 Pool, 혁신적 BM, 유통 채널, 투자자본 등 단계별, 투자자본 등 단계별, 영역별 Pain point 존재



SK의 SE 생태계 활동 현황

현재 SK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거의 전 영역에서 활동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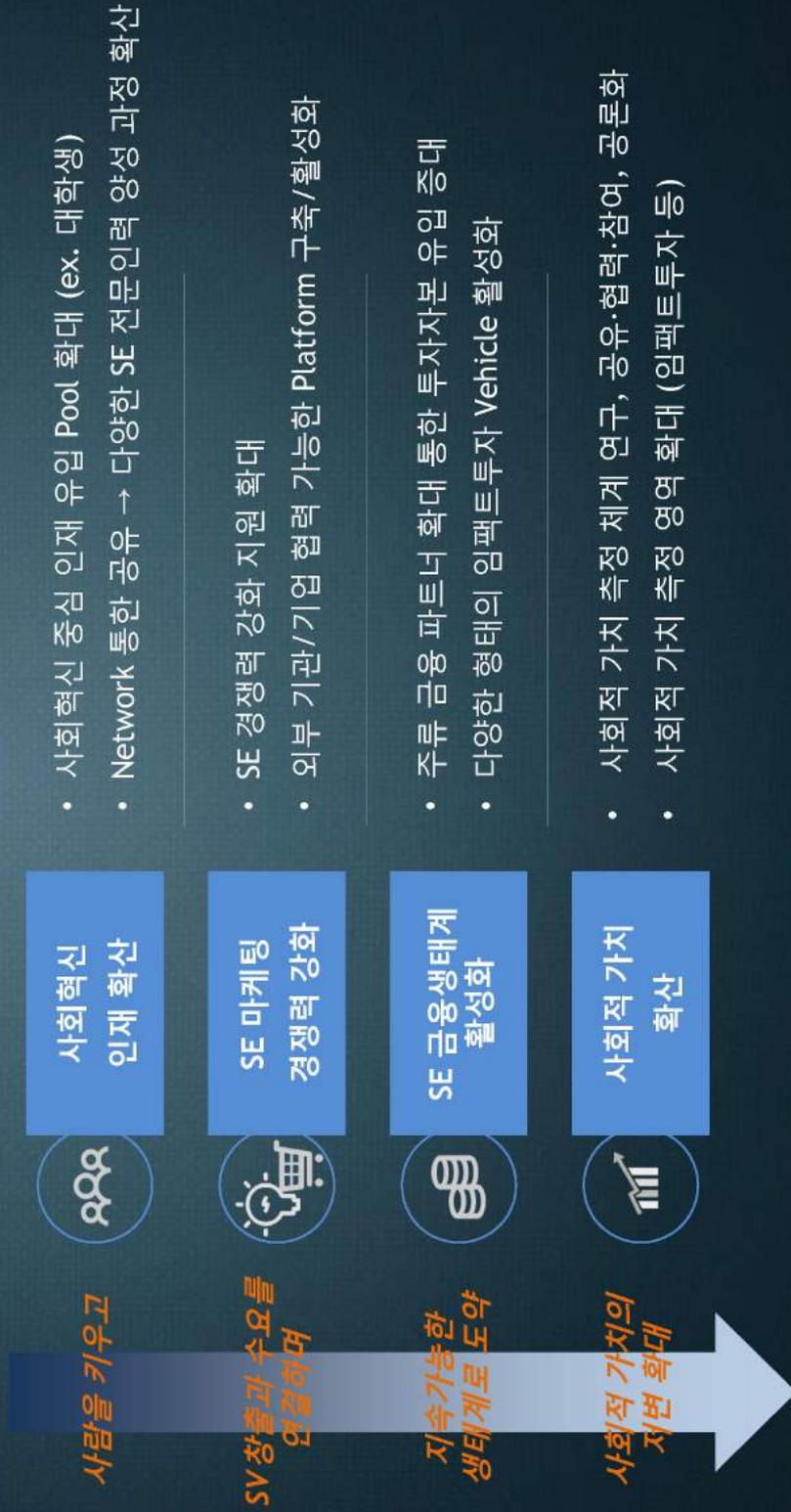
※ 2018년 3월 기준

1) Educators Network for Social Innovation 2) KAIST 별도 3) 행복나래 제외

향후 주요 과제

인재, BM, 소비, 투자 외 SV 확산 영역에서 SE 생태계 활성화 및 확산 위한 노력 필요

주요 과제



제1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